

#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공청회

— 자 료 집 —

일 시 2015. 5. 14 (목) 15:00~17:00

장 소 대한건축학회 강당(B1)

주최·주관 국토교통부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후 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uia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새건축사협의회 대한건축사협회



# 진행순서

15:00~15:10	개회사	김진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환영사	제해성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15:10~15:40	주제발표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안) 김상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5:40~15:50	휴식 및 정리	
15:50~16:50	전체토론	[ 좌장 ] 운영태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토론 ] 박소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공희 국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이정면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강인호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과장 김상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6:50~17:00	기타 질의응답	
17:00	폐회	





##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안)

본 자료집에 수록된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안)은  
부처협의 및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변경될 사항으로  
확정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안)

## (2015~2019)



2015. 5. 14

국 토 교 통 부  
건 축 정 책 관



# 목 차

I . 계획의 개요 .....	1
1. 건축정책의 필요성 .....	1
2. 법적근거 .....	2
3. 추진경위 .....	2
4. 계획의 주요내용 .....	3
5. 관련계획과의 관계 .....	4
II . 제1차 기본계획 성과 및 반성 .....	5
1.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주요내용 .....	5
2. 우수점 및 주요실적 .....	6
3. 한계 및 반성 .....	8
III . 여건변화와 도전과제 .....	11
1. 건축·도시 여건변화 .....	11
2. 현황과 도전과제 .....	16
IV .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추진 방향 .....	33
V . 정책목표별 세부 실천과제 .....	35
1. 목표 1. 행복한 건축 실현 .....	35
2. 목표 2.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	51
3. 목표 3. 건축문화 융성 .....	68
VI . 실행체계 .....	83
1. 관련 주체별 역할 .....	83
2. 실천과제별 로드맵 .....	84
3. 기본계획 성과관리체계 .....	88




## 1. 건축정책의 필요성

### □ 개발시대 ‘양적성장’에서 성숙시대 ‘질적성장’으로의 전환

- 문화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질적 성장의 시대에 부응하는 건축·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전환 필요성 증대
    - 건축은 국가 고정자산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GDP의 약 18%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성장산업
  - 국토환경의 디자인 향상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 및 국가의 품격 향상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
    - 기능적·경제적으로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및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필수요소
- \* 건축물의 미적 요소와 문화적 풍부함은 도시 이미지와 문화산업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주요 국가경쟁력 지표로 작용

### □ 주요 국가정책으로서의 건축정책의 중요성 증대

- 국가 경제 수준에 부합하는 선진국 수준의 건축·도시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건축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단순한 건설의 하위 단위가 아닌 문화와 국민 삶에 직결되는 요소로서의 건축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공감대 형성

 국토환경의 품격은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 쾌적하고 풍요로운 도시환경, 잘 보존된 건축자산 및 자연환경을 통해 구현 가능

## 2. 법적근거

- 건축기본법에 따라 5년주기로 건축의 품격 및 품질향상, 도시경관 향상 등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 계획수립 근거 》

- ✓ (건축기본법 제10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정책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3. 추진경위

- 건축기본법 제정('07.12월), 시행('08.6월)
- 건축정책 국제심포지엄 및 토론회 개최('08.11월)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구성('08.12월)
- 건축정책기본계획(안) 부처협의('09.7월)
- 대통령보고 및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고시('10.5.3.)
- 2010~2012년 건축정책기본계획 성과 국회보고('13.3월)
-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준비 TF 구성·운영('14.4월~12월)
- 제2차 기본계획(안) 관계부처 협의('15.3월~4월)
- 제2차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15.5월)
- 2013~2014년 건축정책기본계획 성과 국회보고('15.6월 예정)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 및 제2차 기본계획 고시('15.6월)



## 4. 계획의 주요내용

□ 시간적 범위 : 2015년 ~ 2019년 (5년)

□ 내용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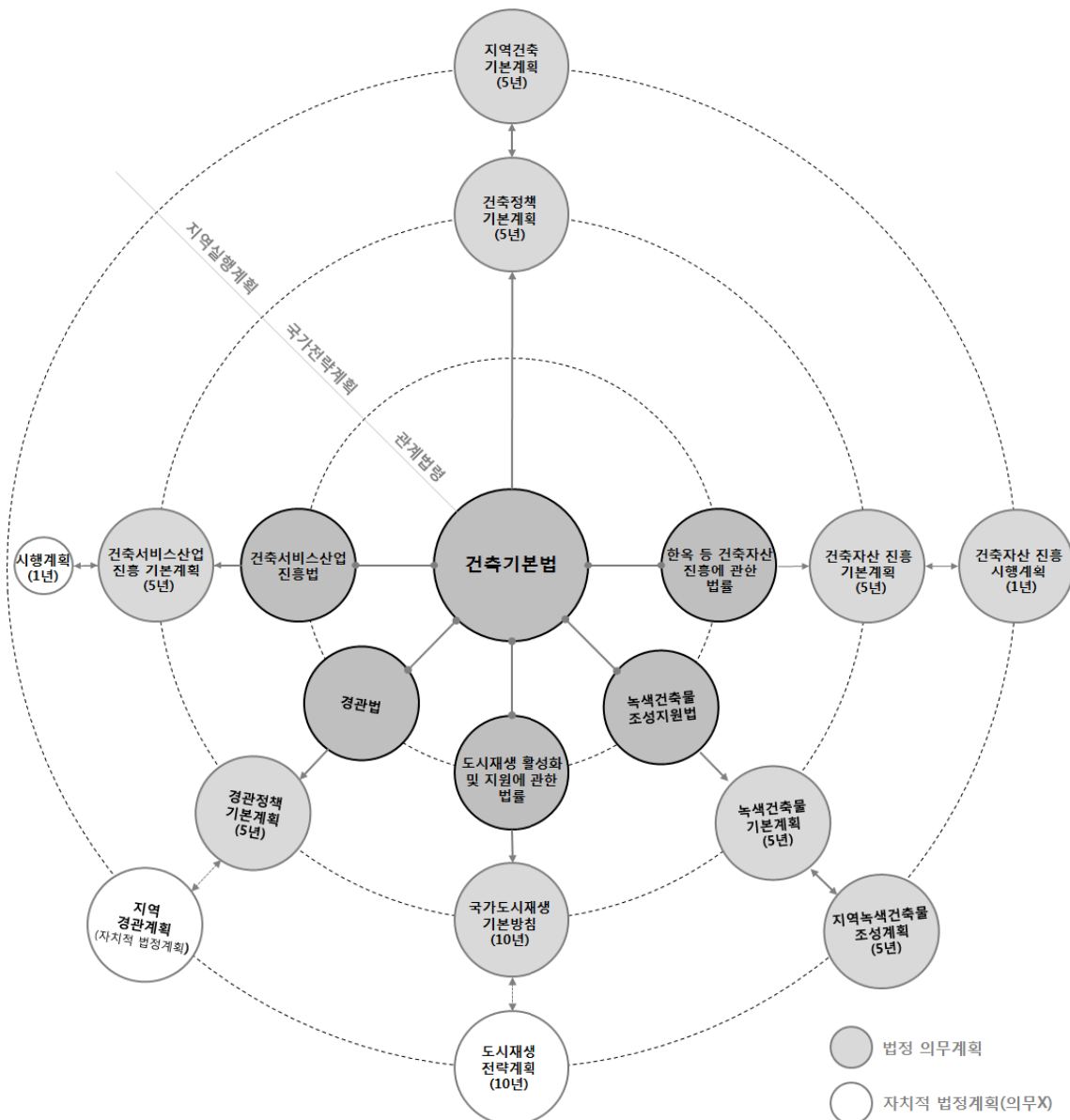
건축기본법 제11조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3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li> <li>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li> <li>3.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li> <li>4.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 향상</li> <li>5.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 대책</li> <li>6.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li> <li>7. 건축분야 전문 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li> <li>8.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li> <li>9. 건축문화 기반구축</li> <li>10. 건축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선도시범사업</li> <li>11. 건축정책기본계획 시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물에 대한 국민 교육과 홍보</li> <li>2.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li> <li>3. 한옥의 보전 및 진흥</li> <li>4.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 구축</li> <li>5.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li> <li>6. 그 밖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의결한 사항</li> </ol>

### 《 계획구조 및 구성체계 》

- ✓ **(비전 및 정책목표)** 건축정책의 장기 비전 달성을 위해 지향해야 할 기본 목표
- ✓ **(추진전략)**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건축·도시환경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 ✓ **(실천과제)** 추진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방향
- ✓ **(세부단위과제)** 실천과제별 구체적인 단위사업

## 5. 관련계획과의 관계

-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디자인 품질 향상, 녹색건축 및 설계산업 육성, 경관관리 등을 위해 다양한 법령 제정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경관정책기본계획,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이 수립될 예정
  -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주거, 복지, 에너지, 산업, 건축문화, 경관 등 건축분야 전반에 대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으로 관련계획간 긴밀하게 연계



건축정책 관련 법령 및 계획간의 관계

## Ⅱ

## 제1차 기본계획 성과 및 반성

### 1.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주요내용

○ 아름다운 국토와 쾌적한 삶의 구현을 위한 3대 목표, 6개 추진전략, 18개 실천과제를 제시

-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세부실천과제별 이행실적을 총괄적으로 취합하여 매 2년마다 주요성과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

비전	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터		
목표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	건축·도시분야 녹색성장 기반구축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
전략	1. 국토환경 디자인 향상	3. 녹색건축·도시구현	5. 고유한 건축문화 창달
실천 과제	1) 지역 및 도시경관 향상 2) SOC 국가기간시설 디자인 제고 3) 공공부문 디자인 향상을 위한 기반강화	1) 탄소저감형 도시환경 조성 2)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 3) 친환경 주택건설 공급 활성화 4) 녹색건축 선도사업 추진	1) 고유한 건축문화유산의 보전·활용 2) 지역 건축자산을 재활용한 건축문화 창조 3) 지역별 대표거리 조성사업 추진
전략	2. 건축·도시환경 개선	4. 건축·도시산업의 고도화	6. 건축문화의 세계화 촉진
실천 과제	1) 공공건축 디자인 쇄신 2) 민·관이 협력하여 도심 재창조	1) 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2) 미래 기술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3) 건축·도시 핵심기술과 설계기법 개발	1)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 실현 2) 건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 3) 건축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토대 구축

제1차(2010~2014)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 2. 우수점 및 주요실적

### □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이행목표 달성 : 81%

- 건축정책기본계획의 113개 단위실천과제에 대한 성과점검 결과 총 92개의 단위 실천과제를 수행 완료했거나 현재 진행 중
-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통해 건축정책을 선도하는 유럽국가 수준의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축정책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

### □ 체계적인 건축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법적 근거 마련

- 건축정책의 수립 및 체계적 집행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다수의 법률을 제정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경관기본계획 등 다양한 건축정책 연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근거 확보



건축정책 주요 성과 및 추진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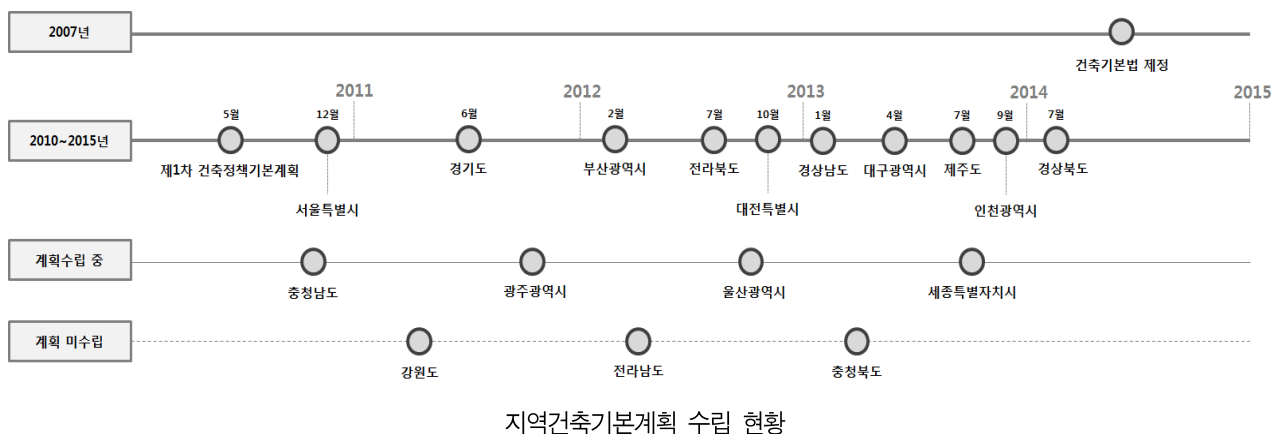
- 건축진흥원, 공공건축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지역 건축디자인 향상을 위한 전담지원기구 마련

##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주요성과

건축정책 기본계획	법·제도	계획 및 사업
품격있는 생활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li> <li>경관법 개정(2013)</li> <li>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li> <li>특별건축구역(2007), 특별가로구역(2013) 제도 도입</li> <li>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28개, 162억원 지원)</li> <li>민간전문가 지원 시범사업(거창, 안동, 완주 지원)</li> <li>해피하우스 사업(서울, 전주, 대구 지원)</li> <li>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200억원 지원)</li> </ul>
건축·도시 분야 녹색성장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2012)</li> <li>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01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이차보전 20억원 지원)</li> <li>그린홈 보금자리주택 공급</li> <li>저탄소녹색시범도시 선도사업(거창, 포천, 강릉)</li> </ul>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4)</li> <li>건축협정제도(2013) 도입</li> <li>(국가한옥센터 설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한옥플랜 수립 및 한옥 R&amp;D 추진</li> <li>공공건축상(2011년부터 매년 5건), 신진건축사상(2013년 12인) 등 각종 시상제도 운영</li> <li>지역별 대표거리 조성사업 추진</li> </ul>

## □ 국가건축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지역건축정책의 수립

-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 중
-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을 시작으로 경기도, 인천, 대전, 부산, 전라북도, 제주도 등 11개 광역 지자체에서 건축기본계획 수립 완료
-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3개 지자체에서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 중



### 3. 한계 및 반성

#### □ 단일부처에 한정된 건축정책

- 건축정책은 다부처간 협업이 중요한 반면 1차 계획에서는 86%(113개 과제 중 16개 과제만 타부처와 협력)과제가 국토부에 한정
- 앞서 건축정책을 도입한 유럽국가에서는 다수의 부처가 건축정책에 참여하고, 부처간 협업을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설정
- 건축분야의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 조정을 담당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 강화 필요

#### □ 사회적 정책이슈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방향 모색

- 안전, 재난·재해, 범죄, 건강, 보육 등 복지와 관련된 건축정책이 미비하여 최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신규 정책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창조경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맞춤형 복지, 창의교육, 국민안전 등과 관련된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건축정책 발굴 필요

#### □ 건축정책 전반에 대한 성과관리체계의 내실화

- 국가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매 2년마다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지역건축기본계획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는 미비한 실정
- 계획된 정책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체계적인 성과관리는 건축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발전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
- 지역 건축정책의 총괄관리에 대해 지역건축위원회에 그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나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심의 기능에 초점이 맞춰짐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연계하여 지역 건축정책을 총괄 관리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체계 마련

'90년대부터, 유럽 각국은 국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가차원의 '건축정책'을 수립·시행

- 국가차원에서 건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는 높은 국가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 보유
- 핀란드, 프랑스, 스코틀랜드, 영국 등 16개 국가가 건축정책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 14개국에서 국가차원에서 건축정책을 추진 준비
- 안홀트 국가브랜드지수(2013)에 따르면, 조사 대상 50개 국가 중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순으로 국가브랜드가 높은 특성



유럽의 건축정책 수립국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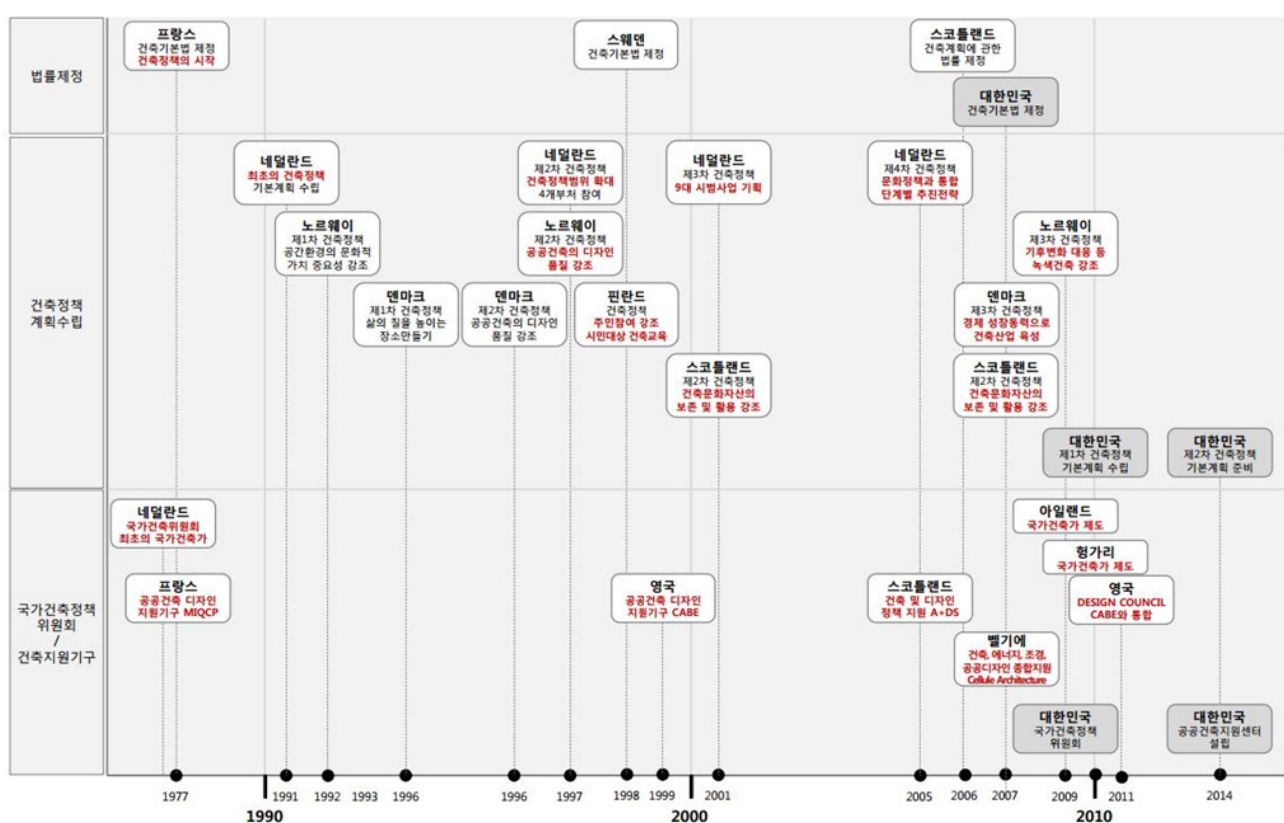
※ 영국왕립건축가협회는 '14년 차기 정부의 장기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Building a Better Britain'을 발간

- 공통적으로 정책근거를 ①법률 제정을 통해 마련하고, ②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부처간 정책적 조정을 관장하는 ③지원기구 설립의 3가지 방식을 통해 정책 추진

- 건축 및 도시환경의 디자인, 산업, 기술 향상 및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건축행정 프로세스와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둔 정책 시행

- 건축정책을 선도하는 유럽국가들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건축정책을 수립하여 시행

- 1991년에 작성된 네덜란드의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필두로 다양한 국가에서 중장기적인 연차별 정책계획을 수립



국가별 건축정책 수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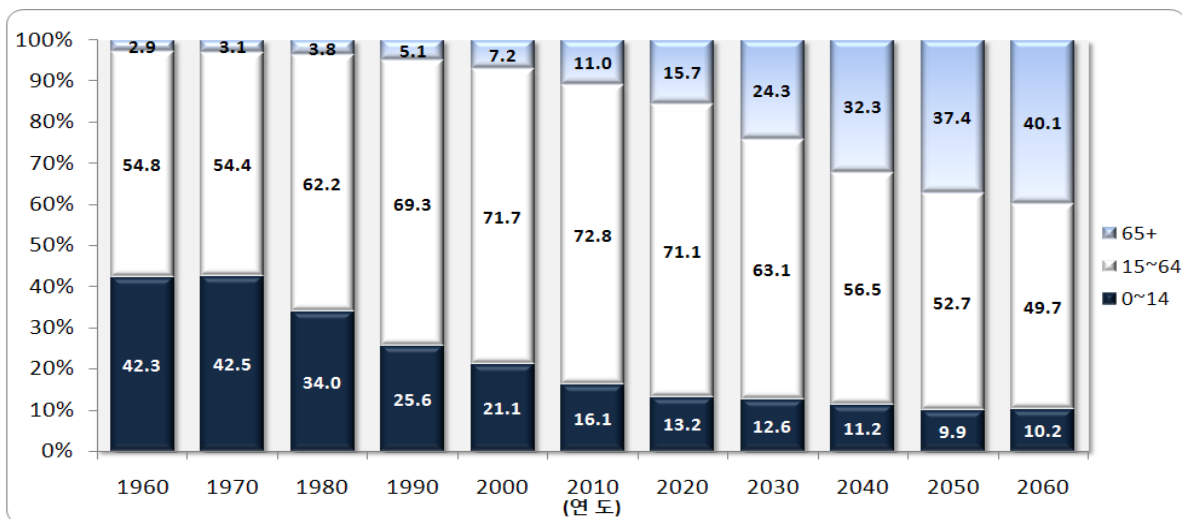
### III

## 여건변화와 도전과제

### 1. 건축·도시 여건변화

#### □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 수요 증대

- 산업화·고속 성장에서 정보화·안정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지식기반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시급
- 기존의 대량생산을 위한 물적 토대를 다변화하여 다양한 계층의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다품종·소량생산 체제의 맞춤형 개발 수요에 대응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1960-2060

출처 :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보도자료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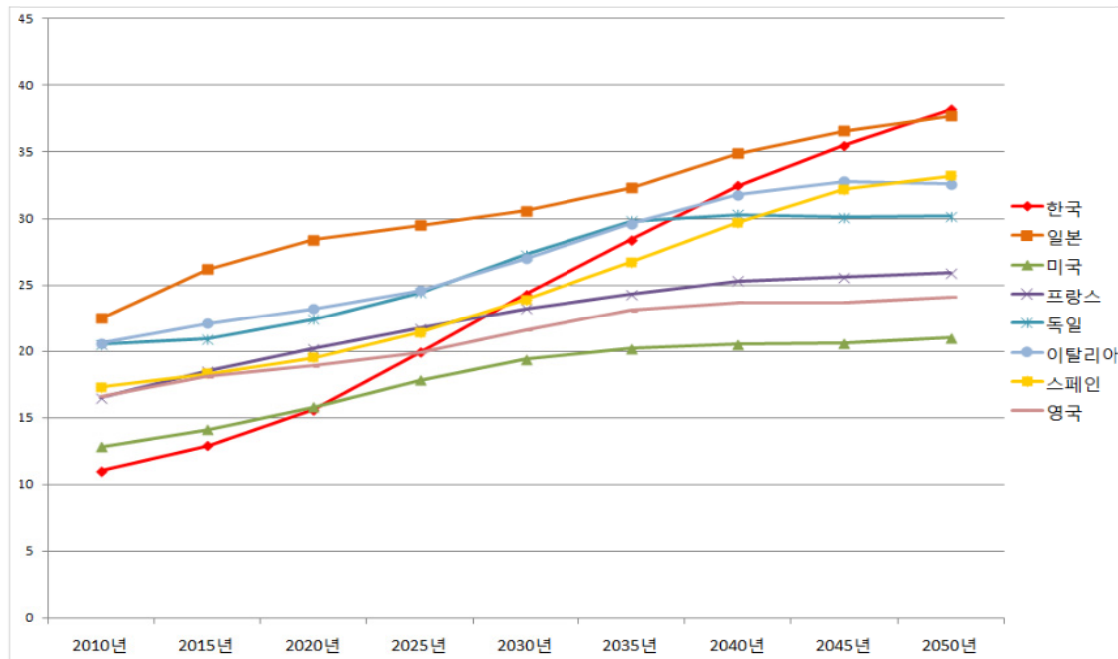
#### □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복지정책의 중요성 증대

- 의료기술의 발달 및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평균 수명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지속적 출산율 감소\*로 생산인력 부족 및 노인부양 부담 증가 등의 문제 발생

\* 우리나라 출산율은 초저출산 기준인 1.30명을 밑도는 수준이며 감소 추세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

- 최근 고령화 추세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인복지주택 확대,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대응책 마련 시급

\*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2014년 현재 12.2%, 2050년에는 39.5%로 세계 2위에 이를 전망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5년 전체인구의 16.7%를 차지할 것으로 추계(통계지리정보서비스)



OECD 주요국 고령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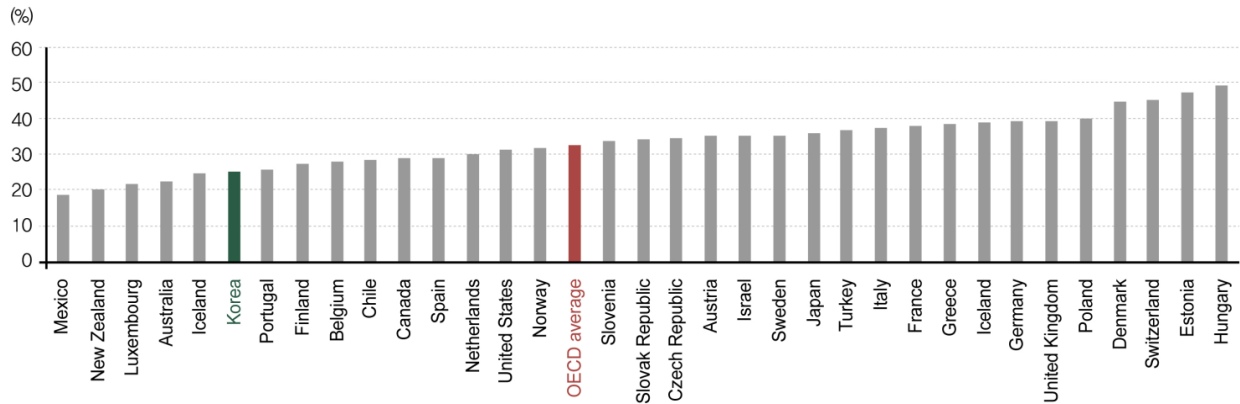
출처 : 대한민국정부(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건축 정책 개발 필요성 대두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급증
  -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97년 105.0백만톤CO<sub>2</sub>eq에서 '11년 138.7백만톤 CO<sub>2</sub>eq로 꾸준히 증가
  - 2030년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2006년 대비 1.5배 가까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
-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배출량의 약 25%로 산업부문 (50%)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차지

- 국가가 선진화 될수록 제조업 등의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낮아지고, 건물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

※ 국내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향후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OECD 국가별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 비중

출처: OECD/IEA, 2013, 국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서 재인용

- 건물 부문은 타 산업부문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잠재력 대비 감축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드는 분야로 국가계획에서도 건물부문을 핵심과제로 선정
- 해외 선진국들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건물부문에서의 다양한 정책 시행 중
- 국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2014)을 통해 건축물 냉난방 에너지 저감, 건축물 내 각종 설비, 운영단계의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사용 정보 공개 등 건물부문에서의 감축정책 추진
-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폭염, 홍수, 지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증가
- 매년 발생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는 주거환경의 질을 저하시키며, 세계 여러 도시에서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기상이변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구현을 위해 도시방재 개념을 도입

※ 최근 10년간('04~'13)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연 평균 인명피해 28명, 재산피해 약 8,300 억원에 달함

## □ 도시 쇠퇴화 및 사회 양극화 심화에 대한 국가적 대책 마련 필요

○ 199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도시의 쇠퇴화가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

-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쇠퇴화문제가 서울 및 광역도시에서도 심각한 수준으로 대두되기 시작

※ 2005년~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 144개 도시 중 96개 지역(약70%)에서 도시쇠퇴 징후를 보이거나 진행 중

○ 농촌과 도시 간 주거환경의 질적 양극화 심화

- 농촌 읍·면 지역은 도시보다 기초생활인프라 및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노후주택의 비율이 높아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거주자의 질이 열악한 실정

※ 우리나라 도시인구비율은 2012년 기준 90% 이상으로(행정구역 기준 90.2%, 용도지역 기준 91%) 도시지역에 인구집중이 심화된 반면 농촌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시군별 도시화율(2012)

행정구역		도시지역 인구비율 (%)		행정구역		도시지역 인구비율 (%)	
		도시지역 인구기준	행정구역 인구기준			도시지역 인구기준	행정구역 인구기준
시	서울특별시	100.00	100.00	도	경기도	91.95	93.16
	부산광역시	100.00	98.57		강원도	80.49	77.98
	대구광역시	99.98	98.25		충청북도	80.02	79.28
	인천광역시	97.59	97.71		충청남도	65.32	67.68
	광주광역시	100.00	100.00		전라북도	78.68	77.14
	대전광역시	99.63	100.00		전라남도	69.43	66.13
	울산광역시	99.80	94.25		경상북도	76.79	74.53
	세종특별자치시	78.21	100.00		경상남도	84.63	74.94
					제주특별자치도	90.60	94.44

## □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

○ 해외의 국가별 경쟁력을 비교하는 척도가 경제수준에서 국민 삶의 질 수준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

- 캐나다 웰빙지수(CIW), 호주 향상지수(MAP), 프랑스 행복지수(GDH), 영국 웰빙지수(MNW), UN 국민총행복지수(GNH) 등

○ 한국의 노동환경 및 여가활동은 질적·양적 측면에서 모두 낮은\* 수준

- 특히 육아부담을 안고 있는 여성을 비롯하여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

\*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 주5일 근무제와 주5일 수업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2010년 대비 2012년 여가시간(4시간 → 3.3시간)과 여가비용(16만 8천 원 → 12만 5천원)은 감소(문체부)

※ 2014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문화여가행복지수 연구결과, 한국인들의 문화여가행복지수는 70.1점이며 남성(70.5점)이 여성(69.7점)보다, 20대(72.6점)가 70세 이상(65.6점)보다, 가구 소득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73.1점)가 100만원 미만 저소득자(64.2점)보다, 대도시 거주자가 지방거주자보다(대도시 70.6점, 중소도시 70.3점, 읍면 68.2점) 높게 나타남

여가활동만족도(13세 이상 인구)(2013)

특성별(1)	특성별(2)	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계	100.0	6.6	20.4	47.8	18.9	6.2
	15세 이상	100.0	6.3	20.2	48.1	19.2	6.3
동·읍면부	동부	100.0	6.8	21.0	47.6	18.5	6.2
	읍면부	100.0	5.9	17.9	48.9	21.0	6.3
성별	남자	100.0	7.4	21.0	47.9	18.0	5.8
	여자	100.0	5.9	19.9	47.8	19.8	6.6
연령	13~19세	100.0	13.1	26.9	43.2	12.8	4.0
	20~29세	100.0	8.2	25.7	47.5	15.3	3.3
	30~39세	100.0	5.7	20.8	48.1	19.5	6.0
	40~49세	100.0	5.7	21.6	46.2	18.9	7.5
	50~59세	100.0	5.7	18.1	48.0	21.2	7.0
	60세 이상	100.0	4.5	13.6	51.9	22.3	7.7
	65세 이상	100.0	4.1	12.6	52.2	22.9	8.2

## 2. 현황과 도전과제

### ① 건축물 붕괴, 자연재해·재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요구 증대

- 대규모 인명과 재산피해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조성단계나 사용과정에서 안전의식의 고취와 개선 노력은 부족

-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 판교환풍구 추락 사고 등 지속적인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의 불안 가중

※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사망자 10명, 부상자 100여명), 장성요양병원 화재(사망자 21명, 부상자 8명), 판교환풍구 추락사고(사망자 11명, 부상자 11명) 등

-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와 화재, 폭발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의한 건축물 붕괴 등 사고위험 상존

※ 우리나라의 화재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대 중반까지 연간 1만건 이내였으나 1987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0년 이후 4만건에 가까운 사고발생건수 기록

※ '13년 자연재해에 의한 전국 피해규모는 약 1,720억 원 규모이며, 피해규모는 매년 발생하는 지역별 재난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남(소방방재청, 자연재해현황)

- 초고층 건축물 대형 건축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유지관리, 감리, 구조적 안전 등 유지관리점검방향에 대한 보완 필요

- 공동주택 하자 발생에 따른 하자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점증하고 있는 등 시공품질 향상에 대한 필요성 증대

※ 세종시 1-4 생활권 L5~8블록에 건설되고 있는 '모아미래도'에서 철근누락에 대한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수평철근 배근 간격이 설계보다 넓게 배근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아파트 하자분쟁사건이 2010년 69건에서 2012년 836건으로 10배 이상 증가

※ SH공사 및 민간 건설업체의 총 37개단지 27,789세대의 건축공종의 하자발생분석 결과 건축공사에서 약 80%의 하자가 발생<sup>1)</sup>

#### 리모델링 및 해체공사 중 사고사례

건축물	피해내역	사고경위	붕괴일
강남구 논현동 나산백화점	사망1, 부상1	5층에서 근로자 7명이 포크레인으로 철거작업을 하던 중 건물의 1/3 가량이 지하층까지 내려앉음	'98.10.14
강동구 천호동 상가건물	사망2, 부상15	3층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내력벽 철거 중 붕괴	'11.07.20
도봉구 창동 연립주택	사망1	2층 철거작업 중 붕괴	'11.08.29
강남구 역삼동 업무시설	사망1, 중상1	철거 작업중 4개층(3~6층) 바닥 한쪽 귀퉁이 붕괴	'12.0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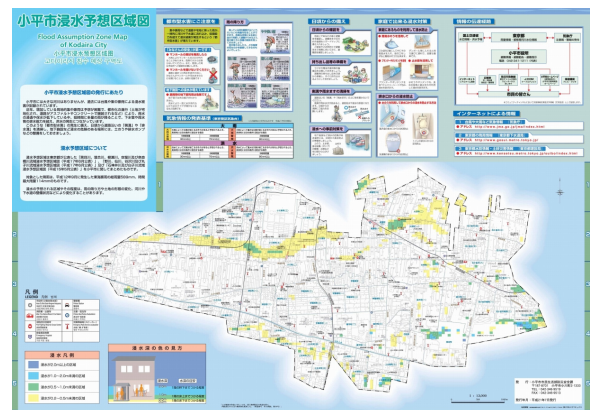
○ 2000년대 자연재해 피해액이 1970년대 대비 약 8.6배, 1990년대 대비 약 2.4배 증가하는 등 재해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 마련 필요

- 국내 주요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는 여름철에 발생하는 집중호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경기, 강원 지역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
- 집중호우는 하천유량을 급증시켜 제방 및 도로침수, 저지대 주택밀집 지역 침수, 산사태 등의 피해를 유발

※ 2013년 호우로 인한 피해는 총 172,137백만원, 주요 피해지역은 경기, 강원 지역으로 나타났다으며, 주요 시설물 피해는 공공시설물로 나타남

#### 일본, 코다이라시 방재 제도

- 일본, 도쿄도 코다이라시는 목조주택 내진 진단 비용 보조 제도, 호우 및 홍수로부터 대비하기 위한 침수 예상 구역도, 피난 장소 검색 등 일상 생활에서 발생가능한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방재, 방범, 교통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 침수 예상 구역도의 경우 토카이 호우의 총우량(589mm), 시간 최대 우량(114mm)의 강우를 상정하여 호우 및 홍수 발생 시 위험한 장소 및 위험정도에 대한 지도를 제작·보급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



코다이라시에서 제공하는 침수 예상 구역도

출처 : 코다이라시 홈페이지(<http://www.city.kodaira.tokyo.jp>)

1) SH공사 도시연구소(2010), ‘공동주택 하자유형 분석 및 사전예방을 위한 연구’, p.17

○ 실내공간에서의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실내환경을 위한 실내환경 기준강화

- 실내건축공사는 건축시장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양적 성장에 대한 질적 관리 필요

※ 업체수 증가추이 : '05년 3,374개 ➡ '07년 3,750개 ➡ '09년 4,240개 ➡ '11년 4,389개

※ '12년 5월 부산에서 발생한 노래방 화재사고는 내부구조의 불법 개조가 원인으로 밝혀지는 등 실내건축 산업의 건전한 육성에 대한 전략 마련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 2014.07.08.)」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등 실내 환경의 중요성 증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정부세종청사를 대상으로 사무실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주요 물질 중 하나인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의 수치가 국내 권고 기준보다 평균 4~6배, 최고 10배 이상 나타난 것으로 측정<sup>2)</sup>

※ 노르웨이 건축규제(Building Regulation 2010)에서는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를 위해 열환경(thermal condition), 공기질(환기, 건축자재에 의한 실내공기 오염), 방음(주거용 건물 및 유사 숙박시설 소음기준, 주거용 건물 외 소음기준), 실내조명(자연광, 인공조명장치) 기준을 제시

○ 2013년 전체 발생범죄 중 약 10%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유형에서 발생

※ 미국 플로리다주의 경우 1996년 인구10만명당 6441건의 범죄는 2005년 3974건으로 줄었으며, 2004년 영국의 범죄율은 1995년대비 40% 이상 감소

※ 영국 웨스트 요크셔 지역에서 SBD를 도입한 주택단지는 인근 지역에 비해 주거침입 절도는 2배, 차량 범죄는 2.5배, 손괴 행위는 25%가량 적게 발생

○ 유흥시설, 공사방치 건축물 등 우범지역 형성 및 방범설비 미흡 등으로 절도·성범죄·살인 등 생활환경의 위험 요소 증가

※ 전체 범죄발생 현황 중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비율이 전체의 30% 내외('11년: 32.0%, '12년: 28.2)로 나타남(경찰청 경찰범죄통계)

2) SBS뉴스2013.01.14.), 세종청사 공기서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 검출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범죄 위험)(2014)

특성별		계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	보통	비교적 불안	매우 불안
전체	계	100.0	0.8	8.1	26.6	43.7	20.8
	만 15세 이상	100.0	0.7	8.1	26.5	43.9	20.9
동·읍면부	동부	100.0	0.8	7.9	26.3	43.5	21.5
	읍면부	100.0	0.9	8.7	27.7	44.9	17.7
성별	남자	100.0	1.2	10.3	30.2	41.6	16.8
	여자	100.0	0.5	5.9	23.1	45.8	24.7
주거유형	단독주택	100.0	0.7	8.3	28.5	44.4	18.1
	아파트	100.0	0.7	8.2	25.6	43.2	22.2
	기 타	100.0	1.1	7.4	26.1	44.1	21.2
연령	13~19세	100.0	2.0	8.7	26.8	40.5	21.9
	20~29세	100.0	1.8	9.7	23.8	39.8	24.9
	30~39세	100.0	0.6	7.7	24.0	41.6	26.1
	40~49세	100.0	0.3	7.3	28.1	42.9	21.3
	50~59세	100.0	0.4	7.6	28.0	46.3	17.8
	60세이상	100.0	0.5	8.1	27.9	48.6	15.0
	65세이상	100.0	0.4	8.3	28.0	48.8	14.4



이천물류센터 붕괴사고



아산오피스텔 전도사건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건

☞ 재해·재난,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관련 기준 정비 및 설계기법 적용을 확대하고, 국민 안전의식 향상 유도

## ② 다양한 계층 및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공간복지 강화 필요

○ 그간의 복지정책은 수요자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에 중점을 둔 소비형 정책에 편중되어, 실질적인 복지인프라로서의 공간시설은 실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 지속

- 어린이집 대기자수가 46만명('14.8 기준)에 이르며, 노인 복지시설수는 전체 인구의 약 2.5%가 이용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여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한 복지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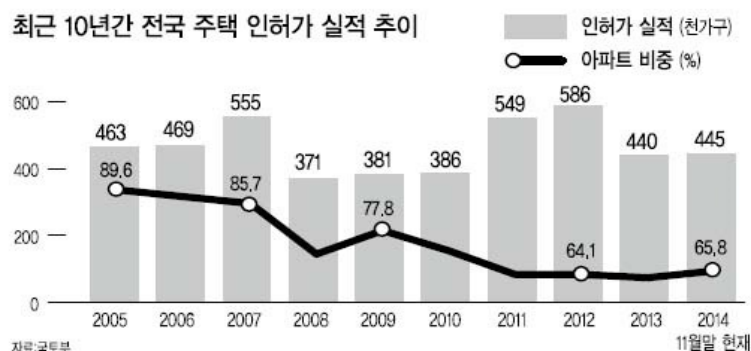
○ 1·2인 가구 증대, 고령사회 진입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맞춤형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 및 다양한 정책 추진 필요성 증대

※ 1, 2인 가구 대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을 위해 '09년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주차장 등 건설기준 및 청약통장 가입 요건 완화

※ 고령자 대상 정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해 온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 사업을 '14년 국책사업으로 선정

- 땅콩주택, 켄거루주택, 셰어하우스 등 주거계층의 세분화에 대응한 새로운 주택유형 개발이 필요

※ 14일 국토교통부의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에 따르면 아파트는 2014년 11월말 총 29만3637가구로, 전체의 65.8%를 차지하는 등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청년층 1인 가구 사이에선 '셰어하우스'(공유주택), 실속형 전원주택인 '땅콩주택', '완두콩주택', 전원주택에 살면서 임대 수익까지 챙기는 '켄거루하우스'도 등장하는 등 주거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헤럴드경제, 2015.1.14. 기사)



최근 10년간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 추이

## 일본, 소형주택 공급 정책

- 수요계층 다면화,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시장 확대
- 관리전문기업(레오파레스21) 성장
- 30~50㎡ 규모의 콤팩트맨션, 웨어하우스, 에이지하우스, 캡슐하우스 등 다양한 임대형태 확대



분쿄 나카자카 소형주택의 실내 모습



주 : 기존주택(78.5㎡)을 2개의 독립주택(57.5㎡ / 20.95㎡)으로 분리  
자료 : 소우켄 코퍼레이션

부분임대주택 사례(기존주택을 2개 주택으로 분리)

## - 학생인구의 증가에 따른 맞춤형 주택과 서비스의 도입이 필요

### 서울시, 독일, 미국의 1인 가구 대상 공공지원사업

- 서울시는 '여성 1인 가구 종합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전용 임대주택 설계기준 마련 및 시범보급 추진
- 독일, 미국은 1인 가구를 위한 보조금 혜택을 보장하였으며, 주거지원 프로그램 또한 병행 지원

추진지역	정 책 명	세부사업 내용 및 목적
서울시	「여성 1인 가구 종합지원대책」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글여성 전용 안심 임대주택' 개발 및 시범 보급하여 소형 임대주택을 2015년까지 2000호 공급</li> <li>•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한 안전장치 설치 지원</li> <li>• '여성 안전마를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여성 1인 가구 임대주택 안전 설계기준' 마련</li> </ul>
독일	본겔트(wohngeld, 집세보조금)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가구에 집세보조금 혜택 제공, 주거용건물의 1인당 최소면적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생활권 보장</li> </ul>
미국 주택 도시 개발부 (HUD)	극빈계층을 대상으로 한 싱글주택 프로그램(SR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화된 호텔, 이용되지 않은 학교 또는 공가 등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 노숙자 등 주거빈곤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제공</li> <li>• 주택소유자는 보수비용 및 임대보조금을 10년 동안 지원 혜택</li> </ul>
	대도시 1인 가구를 위한 임대료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은 주택가격을 감안하여 임대료통제(rent-control) 등 정부차원 개입 (1인 가구 비중이 50%에 달하는 미국 내 주요 대도시)</li> </ul>



Eugene  
Before Renovation



Eugene  
After Reno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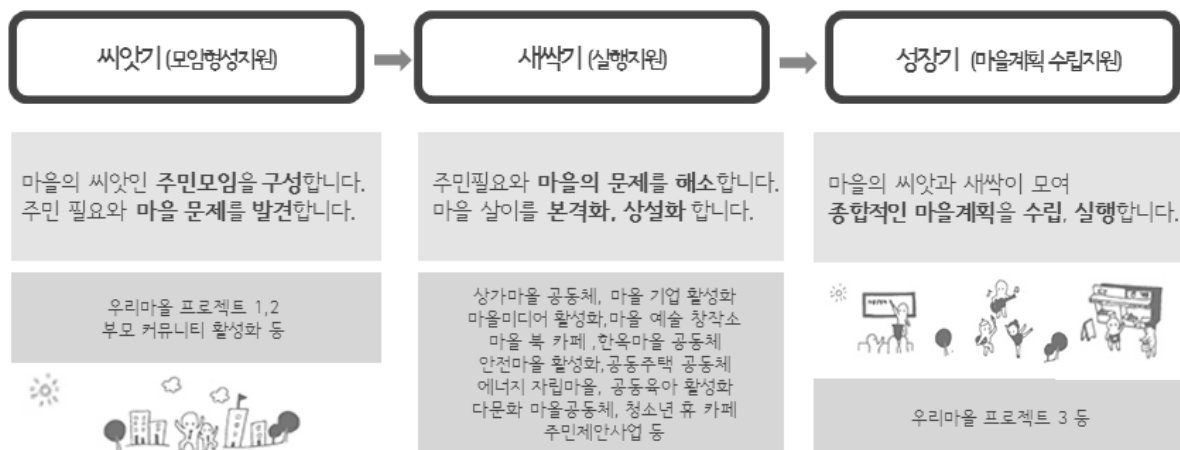
미국 HUD의 '싱글주택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물(출처 : <http://www.srohousing.org/>)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된 마을만들기 운동에 대한 관심의 고조

- 지역 현안에 초점을 맞춰 지역 주민 중심으로 생활 밀착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조성 방안 마련

#### 경기도·서울시의 마을만들기 지원 센터 운영

- 경기도 안산시와 ‘안산마을만들기 시민네트워크’의 협력을 통해 2008년 ‘안산시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출범
- 서울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주민제안 공모사업, 마을활동가 교육 및 연구, 마을상담, 주민제안사업 컨설팅 등 마을사업의 기획 및 경영, 지속을 위한 지원업무 수행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지원사업

○ 농어촌 마을을 총체적인 주거환경 개선 관점에서 재설계할 필요

- 농어촌 지역은 빈집 증가와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도시지역과의 정주 환경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인구 전출이 발생하는 양상



농촌지역의 빈집 및 폐가(충청남도)

☞ 국민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계층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공간복지인프라 구축

### ③ 창조경제 시대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필요

-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편의 등을 좌우하고, 국민 삶의 수준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
- 건축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 유발효과(일반제조업의 1.4배)와 취업유발 효과(일반제조업의 1.9배)가 매우 큰 지식서비스산업

※ 세계적으로 유명한 창조경제의 저자 존 홉킨스(John Howkins)는 창조경제를 이끄는 대표적인 성장동력 산업으로 건축분야를 강조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제적 가치

구분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 효과
건축서비스/제조업	900억/626억(약1.4배)	1,705명/920명(약 1.9배)

-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건축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진출 지원, 기술혁신, 전문지원기관 설치,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 70년대부터 전문지원기관 등 설치, 디자인·아이디어 중심의 발주제도로 전환, 친환경저에너지 녹색건축물, IT지능형 건축물 등 확산
- 우리나라의 설계 경쟁력은 OECD 27개국 중 20위권\*에 머물고 있어 국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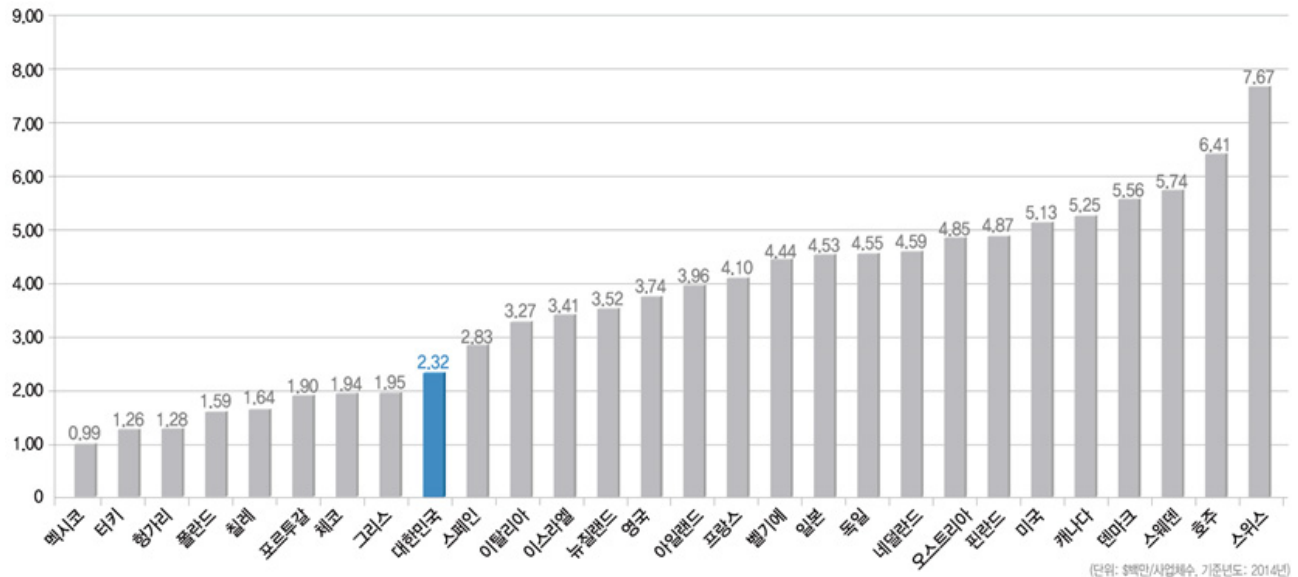
\* 업체당 매출 평균 순위미여, 한국의 사업체당 매출액은 2.32(\$M/사업체)로 OECD평균 3.69(\$M/사업체)의 63%

※ 건축설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정한 심사와 공정한 경쟁에 대한 요구 증대 등 설계산업에 대한 신뢰도 회복 및 소규모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필요

- 국내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수(18,596개) 및 종사자수(211,476명)는 OECD 국가의 평균치보다 높지만 매출액(21,693백만\$)은 낮음



- 상징적 건축물 설계는 외국 건축사가 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으며, 국내 설계자를 홀대하는 관행 때문에 획일적인 설계가 양산되는 등의 건축서비스산업 입지 부족



OECD 국가의 건축설계산업 사업체 당 매출실적 비교

- 건축설계산업을 지식기반서비스산업으로서 육성하고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 및 효율화를 위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14.06)
- 정부(국토교통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14.01)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건축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방안’ 발표
- 공공건축물 설계 발주를 디자인 중심으로 전환, 설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 체계 개선, 건축서비스산업을 미래성장 동력화, 건축 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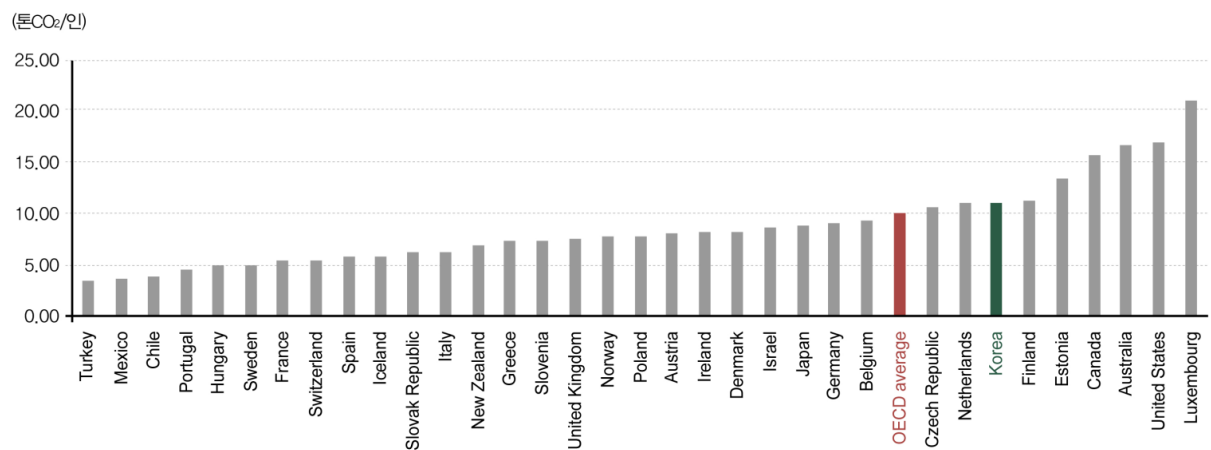
☞ 공공 및 민간부문의 발주·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창의적인 전문인력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추진

#### 4]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 필요성 증가

-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화가 국가차원에서의 핵심과제로 대두
-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는 최근 10년간 약 34.6% 증가하였고, 건물부분의 에너지 소비량\*도 지속적으로 증가

\* '97년 33,071천TOE에서 '11년 37,542천TOE로 14% 가량 증가하였으며, 국가 에너지 소비의 18.2% 차지

- 국내 1인당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31tCO<sub>2</sub> 로 OECD 평균인 10.03tCO<sub>2</sub> 에 비해 10% 가량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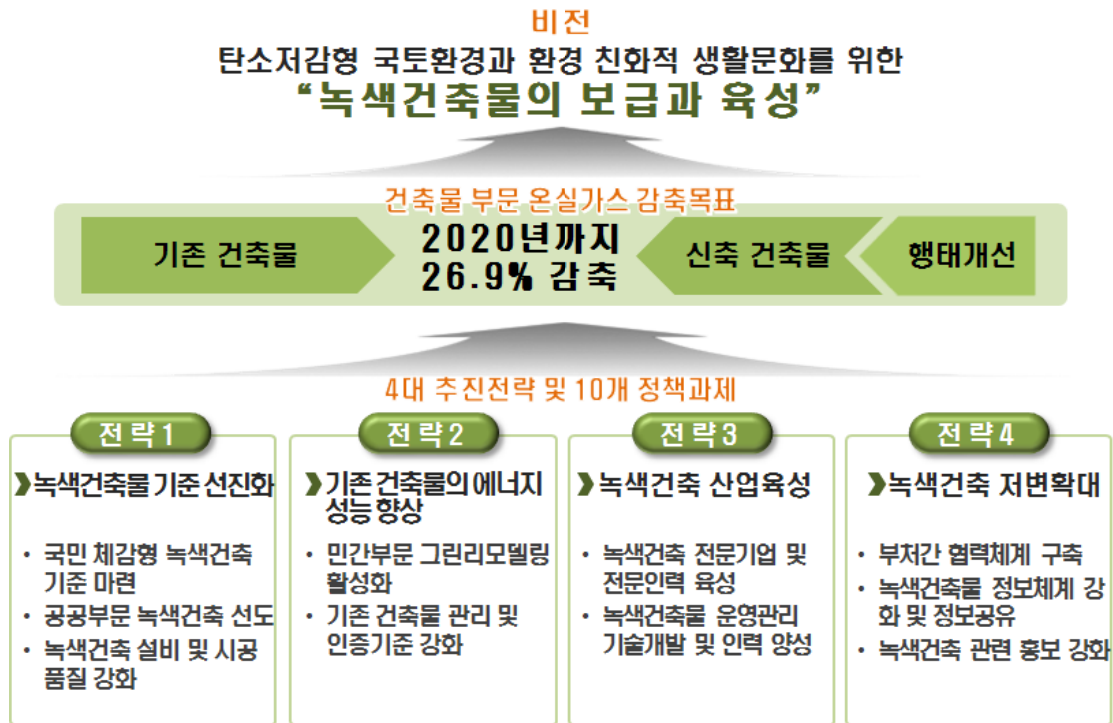


OECD 국가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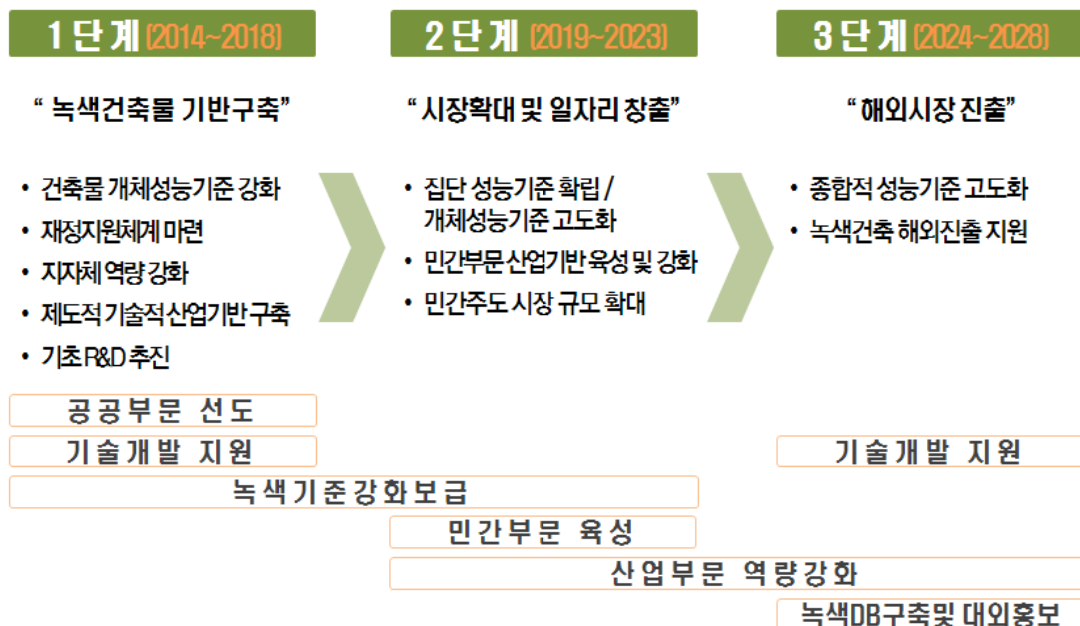
출처: OECD/IEA, 2012, p. 44(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서 재인용)

- 해외 선진국들은 건물부분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녹색건축물 정책을 시행 중
- 미국, 일본,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선진국은 에너지성능지표에 의한 건물 에너지 총량제를 비롯한 건축부위별 성능기준을 운용 중
- 영국은 기존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그린딜 (Green Deal)기본법('12)을 제정하고 그린딜 정책을 추진 중

-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건물부문 온실가스의 배출전망치(BAU) 대비 26.9%까지 감축하는 목표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위한 추진기반 마련 필요
- 2014년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을 위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와 방향을 맞춰 건축정책을 수립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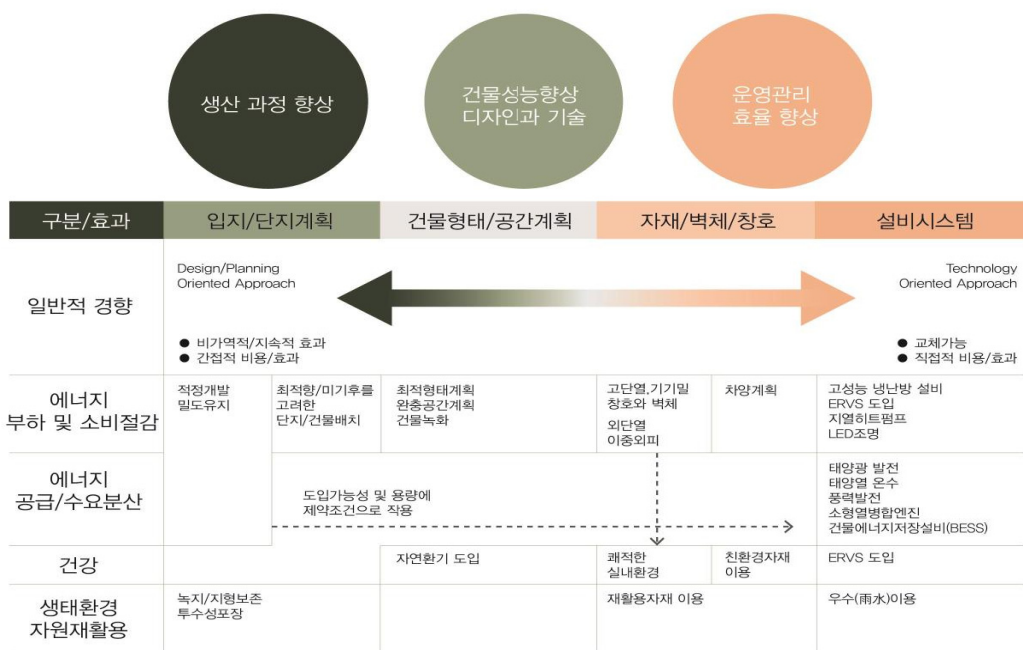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단계별 추진 전략



- 녹색건축은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과 감축 비용을 고려할 때, 가장 효율적인 정책 수단으로 건설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
  - 미국과 유럽에서의 녹색건축 관련 투자는 350만 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을 고려하면 잠재력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
- 녹색건축물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설계 및 건설시장에서 관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 및 기업의 시장 퇴출이 예견되는 상황
  - 해외 각국의 건축물 에너지절감 기술, 친환경 건축자재, 신재생에너지 활용 기술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
  - 녹색건축 분야의 후발 주자인 중국은 5개 성 및 8개 도시를 저탄소 시범대상으로 지정하고 100여개의 대규모 녹색건축물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녹색건축 산업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육성 중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기술요소

출처: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 신축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 기준 향상, 기존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관련산업 및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녹색건축 실현

## ⑤ 고유한 건축자산과 건축문화 가치에 대한 재조명

○ 쾌적하고 매력적이며 정체성 있는 건축물과 도시는 환경은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도시들이 채택하고 있는 중심 전략

- 안홀트(Anholt) 도시브랜드(City Brand Index:CBI) 지수의 육각형 모델(The City Brand Hexagon)에서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을 도시브랜드를 구성하는 6가지 요소 중 하나로 인식

※ CBI의 6가지 요소 중 하나인 'Place'는 도시 기후의 쾌적도, 환경의 청정도, 건축물과 공원을 포함한 물리적 환경의 매력도를 평가지표로 활용

※ 건축에 대한 외국인 인식조사(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9) 결과, 도시 이미지 형성에 영향력이 큰 요소로 건축물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74.7%)

○ 지역의 건축자산은 주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수준을 고양하는 원천이며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

- 세계 주요도시에서는 과거 건축유산을 보존·활용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건축·도시환경을 창조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방안을 병행 추진

※ 1999년에 완공된 덴마크 왕립도서관은 덴마크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신축도서관의 현대적이고 화려한 외관과 구 도서관과의 결합을 통한 독특한 전경은 도서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관광의 거점역할을 함



덴마크 왕립도서관(신관과 구관(좌), 신관 내부(중), 신관 외부(우))

사진 : 윤호선

○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보유한 건축물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발굴역량 부족으로 지역건축자산이 방치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 문화재 관리를 위한 현장방문의 빈도는 높아졌으나 질적 점검수준은 하락

※ 문화유산 향유 및 관리 실태조사 결과(문화재청, 2010)에 따르면 2009년 외형적 점검 사항인 훼손 및 보존 상태 점검 비율이 84.1% (2008년 72.7%)로 높아졌으나, 보존 환경 및 시설 분야 점검 비율은 10.8%로 2008년 17.7%에 비해 하락

※ 서울시청 본관은 1926년에 지어져 역사적으로 건축학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서울시에서 무단철거를 시도

※ 노르웨이 스타방게르 항구 서쪽으로 18-19세기 형성된 하얀색 목조주택(wooden houses)이 역사지구(old town)를 형성하여 유적으로 보존 관리되고 있음. 북유럽 최대의 목조주택 주거지로서 현재 약 170여 채가 남아있으며 일부 예술인들이 소규모 공방을 만들어 제품을 판매



노르웨이, 스타방게르(Stavanger) 상업지역(좌)과 올드타운(우)



노르웨이, 스타방게르 Harbour and Market Place, 과거(좌, 1880년)와 현재(우, 2007년)

출처 : Stavanger Municipality Department of Culture and Urban Development(2009)

○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한옥 브랜드화 사업에도 불구하고 확산효과는 미흡한 실정

- 한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높은 건축비용과 단열문제 등으로 보급 확대에 한계

- 어려운 유지관리, 고비용, 단열 문제 등 한옥에 대한 일반적인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1급 전통한옥 표준단가는 3,498,000원/㎡으로 연면적 85㎡의 전통한옥 신축시 총 공사비는 297,330천원에 이르며, 1급 신한옥 표준단가는 2,668천원/㎡로 85㎡의 신한옥 신축시 총 공사비는 213,222천원으로 산출됨(2013, 한옥건축산업 동향)

- 2008~2009년 전통양식건물 수주결과 주로 공공부문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민간영역의 경우 계속 감소하는 등 민간 수요 증대를 위한 전략 요구

전통양식건물 발주자별 수주액 현황(단위 :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66,699	59,542	41,008	49,555
공공부문	24,332	42,715	24,923	38,535
민간부문	42,367	16,826	16,085	11,020

출처 : 이강민 외(2013), '2013 한옥건축산업 동향',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기존 건축자산의 활용에서 한걸음 나아가 우리의 건축문화를 더욱 발전·진흥시키기 위한 관련분야의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한 시점



서울시립미술관



춘천 어린이회관



인천 아트플랫폼

☞ 건축문화에 대한 국민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교육을 확대하고, 건축문화자산을 활용한 지역브랜드 거점 및 창조적 장소만들기



## ⑥ 아름다운 국토경관 관리로 도시경쟁력 강화

- 아름다운 경관은 도시를 홍보하는 중요 수단이며, 관광효과를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기여

※ 국토교통부는 '14년부터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경관 부문을 8개 평가지표 중 하나로 활용

- 2007년 경관법 제정 이후 경관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 법적인 실효성 확보에 대한 문제점 제기

- 2013년 경관법 개정으로 국가의 역할 정립, 경관계획 체계 개선, 경관심의 도입 등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제도 정착을 위한 실행체계 확보가 시급

※ 85개 지자체에서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수립중, 98개 지자체에서 경관조례를 제정·운용, 76개 지자체에서 경관위원회 운영(2012년)

※ '15년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과의 총괄관리 아래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보전·관리를 목표로 경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경관관리에 대한 전문 역량이 필요하나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경관관리 관련 기반이 미약한 실정

- 경관관리를 위한 행정력의 전문성 강화와 실효성 있는 경관심의 수행을 위한 민간전문가의 역량 강화 필요

- 또한 경관 관련 기초연구 수행, R&D 추진 등을 통한 경관인식 제고 및 경관기술 개발 등 기반 마련 시급

- 매력적인 경관의 형성과 경관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는데 비해 국토경관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수준은 낮은 실정

※ 2008년 국토교통부에서 「경관협정 수립 매뉴얼」, 「경관협정 수립방향 및 주민참여 유도 방안 연구」를 수립하였으나 경관협정사업 진척은 미흡

## 서울시 경관협정사업(강북구, 우이동)

### ▶ 기본방향

- 사업대상지 : 우이동 584번지 일대(29,000㎡)
- “환경친화 마을”과 “이웃과 더불어 사는 마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
- 북한산과 마을 옆을 흐르는 대동천을 포함한 우이동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이웃 간 커뮤니티 향상

### ▶ 주요내용

- 이름답고 보기 좋은 마을을 위한 약속 : 건물입면, 창문, 차양, 건축설비, 간판 등 건축가이드라인 준수
- 걸기쉬운 안전한 길을 위한 약속 : 주차, 보행로 확보, 골목길 조경, 방범용 CCTV 설치
- 깨끗한 거리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약속 :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쓰레기 배출장소 개선, 집 앞 눈치우기, 불법 전단지 제거
- 푸른 마을길을 위한 약속 : 담장 녹화, 옥외공간 녹지조성(자투리땅, 공공공터), 옥상조경 조성
- 살기 좋은 우이동을 위한 공공공간 가꾸기 : 마을하천인 대동천과 진입도로인 진달래길 가꾸기(마을 공동청소, 꽃길조성)
- 이웃 간의 커뮤니티 향상을 위한 약속 : 담장 개방감 확보, 주민쉼터 조성, 경관협정운영회 활성화로 경관관리

### ▶ 사업성과

- 제1회 대한민국 경관대상 / 시가지경관 / 최우수상 /
- 경관협정을 통한 새로운 마을가꾸기의 성공적 도입 : 전국 최초의 경관협정사업 준공, ▶ 주민의 자율적 경관관리 참여(주민자비부담)



강북구 우이동 경관협정 사업 후 모습

- 국토경관의 체계적 개선을 위해서는 국토경관에 대한 미래상을 정립하여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관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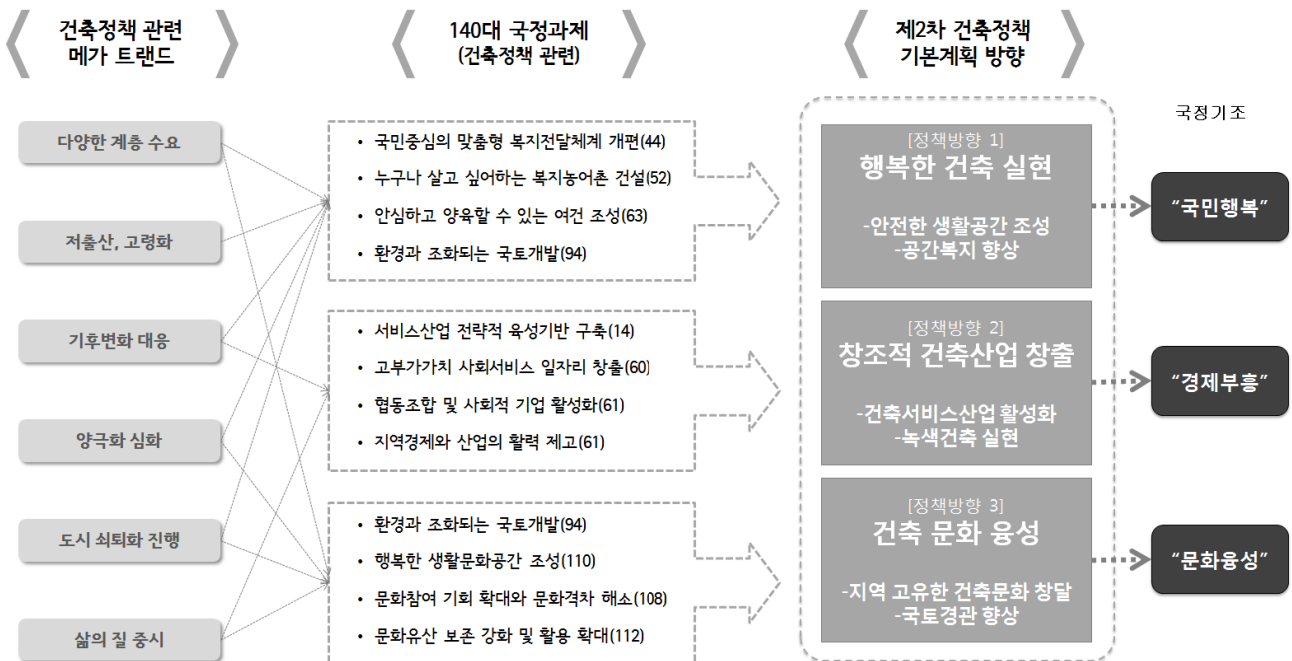
☞ 국토경관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관 관련 기반구축, 내실 있는 경관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국토경관 향상 기반 마련

## IV

##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추진 방향

### □ 새로운 국가건축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 건축·도시 여건 및 정책수요의 변화와 140대 국정과제 등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제2차 건축정책 방향 설정



### □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건축정책 기본원칙

- (국민행복) 국민이 일상적으로 영위하는 공간 개선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
- (경제부흥) 건축서비스산업 체계 개선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추진동력으로써 자리매김
- (문화융성) 건축정책과 건축도시디자인 체계 정비를 통해 지역문화를 육성하고 향유기회를 확대

## □ 제2차 건축정책의 비전 및 목표

- “안전과 행복, 창조와 문화를 이끄는 건축” 비전 실현을 위한 3개 목표, 9개 추진전략, 24개 실천과제 도출





## 목표1. 행복한 건축 실현

### □ 추진배경

- 자연재해, 안전사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건축과 도시환경의 구현
  - 지구온난화로 잦은 홍수와 범람, 해일의 발생,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과 개발에 의한 산사태의 발생 등 도시지역에서의 자연재해가 빈발



2011.7.27 발생한 서울  
우면산의 산사태현장



2012.9.17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해일



2010.9.22 집중호우로 인한  
서울 광화문 침수

-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도시 내 빈집 등이 성범죄·살인 등 강력범죄에 이용되는 등 생활환경의 위험요소 해소가 절실

※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5.23. 시행)이 제정되어 2년마다 전국단위의 실태조사와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이 수립될 예정

#### 서울특별시, 범죄예방디자인(CPTED) 사업

- 홍은1동 사례 : 비상벨·의자 등의 기능을 갖춘 정(情)류장 조성, 동네사랑방(호박골 사랑방) 설치, 캠페인 안내사인 설치, 안전시설물 개발, 마을안내사인 설치로 인한 범죄예방, 생활안전
- 서초구 양재 시민의 숲 사례 : CCTV, 비상벨, 비상등, 사이렌, 출입구 안내표시 시스템 연계 및 구 관제센터와의 연결을 위한 '안전등대시스템'적용, 지식카페·서재 및 산책로 조성을 통한 안전한 숲 마련
-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가 컨설팅 주축, 타 실국과 협조하는 방식으로 협업
-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예방디자인 매뉴얼 제작 및 보급



리모델링 후 호박골 사랑방을 이용하는 주민들



양재 시민의 숲 <지식서재> 야간 설치 예시

- 건축물 실내공간에서 마감재의 품질이나 설계의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과 어린이의 피해가 급증

※ 2013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4,209건(사망 13명)에 이르며 이 중에서 설계의 미흡에 의한 경우가 3,408건을 차지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의 진료비는 2008년 기준 4,033억 원이며, 환자 수는 495만 명으로 2002년의 302만 명보다 64% 상승

## ○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간복지 서비스 수준의 향상

-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향후 노인의 복지수요 급증이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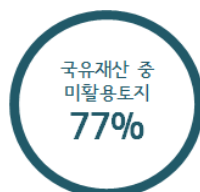
\* 고령화사회는 65세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7%이상인 경우, 고령사회는 그 비율이 14% 이상인 경우를 지칭

- 0~2세 아동 무상보육과 3~5세 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 및 누리과정 도입(2013년 시행)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새로운 아동복지 공간수요의 발생

\* 2012년말 현재 10.1%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정부가 제시한 30%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5,71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수요 발생

## ○ 도시의 쇠퇴와 심각한 사회 양극화 문제에의 선제적 대응

- 산업구조의 재편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공간이용 수요의 변화로 도시 내 유휴공간의 급증



\* 전국의 공가(빈집)수 약 800,000호(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국유재산(일반재산) 중 미활용 토지의 비율 77%(감사원 보고, 2005년), 2011년까지 3,500여개 학교의 폐교, 전국 전통시장 점포의 10% 공점포(전통시장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2010년) 발생 등

- 199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도시의 쇠퇴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

\*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4년에는 전국의 13개 지역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

- 농어촌의 읍·면 지역은 기초생활인프라와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노후주택 비율이 높아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거주자의 질이 열악한 상황

## □ 추진방향

### ① 건축물 붕괴, 자연재해·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간환경 조성 및 관리체계 구축

- 건축물 조성과정의 설계, 시공기준, 사후 안전관리의 체계 부실이 그간의 중대형 건축물 안전사고의 실질적인 원인
-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건축물 조성 단계에 안전관련 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허가 과정에 안전도서를 검토하는 등 건축물 안전관리 기준 및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
- 각종 자연재해, 인적 재난의 증가에 따른 건축물 및 생활공간 안전사고 예방, 사후 관리를 위한 대응 시스템 개발 필요
- 1990년대 대비 2000년대 자연재해 피해액은 3배이상 증가,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의무화(제20조,27조)
- 안전한 공간환경 구축은 국민의 자발적 안전문화 실천과 역량강화가 무엇보다 중요
- 안전행정부 안심마을시범사업, 여성가족부 지역안전프로그램 등 주민 중심, 지역단위의 다양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 중

(생활공간의 안전성 증진) 생활안전 관련 건축물 제도 정비 및 설계 기법 적용을 확대하고, 국민 안전인식 향상 유도

- ☞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세부실천과제 중 2-4-2(미래 기술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과의 지속성 확보
- ☞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범국민적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② 다양한 사회적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복지 강화 필요

- 어린이 보육, 청소년 교육, 여성의 사회 진출, 고령화 등 사회적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맞춤형 복지에 대한 지역 공간복지 시설의 양적·질적 관리 요구 증대
-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의료, 교육, 문화,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장소중심의 공간복지 정책 추진 필요
- 기초생활인프라는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 복지 실현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 담당
- 근린생활권 단위에서 지역 수요 맞춤형 공간복지시설 확충, 주거 기능과 생활편의지원을 위한 공간복지 시설 연계 등 부처협업사업 추진 필요

(생활밀착형 공간복지 체계 구축) 다양한 계층 수요를 고려한 건축과 연계한 맞춤형 공간복지 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세부실천과제 중 3-6-1(국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 실현)과의 지속성 확보
- ☞ 어린이, 청소년, 고령층을 위한 수요맞춤형 공간복지시설 확충 및 근린생활권 단위의 공간복지시설 통합 연계를 통한 공간복지 접근성 및 효과성 제고

### ③ 지역 건축 여건을 반영한 주민 주도형 마을 재생 활성화 지원 강화

- 정부(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종합적,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3.6)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따라 한국형 도시재생의 선도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2014년도부터 13개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지역 맞춤형 재생 사업을 시행 중
  -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 주민의 참여와 지역역량 강화 강조
-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건축 문화 기반의 장소만들기는 총체적 마을 재생 활성화 기여도가 매우 높은 사업
  -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이외의 근린단위 마을 사업(마을만들기,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에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마을 활성화를 위한 건축 융복합적 접근 요구
  - 지역 거점시설과 지역 거점공간은 마을재생 활성화를 위한 장소적 중심점으로서의 역할 담당

(건축이 기여하는 마을재생 실현) 건축 기반의 융복합적 재생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공동체활성화 등 마을재생 목표 구현에 기여

- ☞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세부실천과제 중 1-2-2(민·관이 협력하여 도심 재창조), 2-5-2(지역 건축자산을 재활용한 건축문화 창조)와의 지속성 확보
- ☞ 지역 건축 역량 강화, 건축물 유희공간 재생 활성화, 지역 커뮤니티 거점 공간 제공 등 건축 융복합적 재생의 실효성 제고

## □ 생활공간의 안전성 증진

### 1)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 (생활안전 증진사업 지원) 다양한 지역공동체, 주민활동에 기반한 생활안전 증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축
  - 국민안전처 ‘안전마을 시범사업(2014, 안전행정부, 안심마을 시범사업)’, 여성가족부 ‘지역안전 프로그램’ 등 주민중심, 지역단위 시범사업의 전문성 보완
-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확대) 건축물 및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DB에 기반한 범죄예방환경설계 시범사업 확대
  - 범죄 발생 건축물의 용도, 발생장소 및 피해실태 등 관련 DB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 ※ 미국은 국립범죄예방연구소(NICP)가 중심이 되어 CPTED 기준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도시계획(PPG, PPS)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운용 중
  - 범죄예방환경설계 기법 및 설비의 적용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보급 확대
  - ※ 영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범죄와 무질서에 관한 법률(Crime and Disorder Act)’과 ‘방범인증제도인 SBD(Secured By Design)’를 통해 주택에 대한 범죄예방 도모
- (실내건축 안전관리 절차마련)
  - 화재, 미끄럼, 추락, 충돌, 끼임 등 건축물 실내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실내건축 안전관리 절차 마련
  - 실내건축 안전관리를 위한 책임 주체, 점검 시기 및 주기 등 주요 안전관리 기준절차 마련

## 2) 건축안전 제도 기반 구축

- (지역건축센터 설립) 건축인허가 과정에 건축전문가가 설계도서 검토 지원
  - 지역건축센터에 공사감리자 지정 권한을 부여하여 공공의 건축물 안전관리 책임역할 강화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 초고층건축물, 대형건축물의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당해 건축물 및 인접 시설에 대한 구조·화재·피난 등 종합적인 안전 영향성을 사전에 평가
  - ※ 이자스민의원, 장하나의원이 건축물 안전 검토가 미흡하다며,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의무화를 입법 추진 중
- (건축물 생애주기 정보구축)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설치 기록을 의무화하고, 사각지역·매몰지역 건축물은 중요 공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여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단계의 이력 관리
  - 착공신고 시에는 구조·시공 등에 대한 상세도면 제출을 규정하고, 지반 안전을 위한 대지의 지질·지반조사 관련 자료를 구체화
- (공간위계별 재난·재해에 대응하는 안전시스템 구축)
  -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단지, 건축물 등 공간위계별 재난·재해 위험도를 고려한 건축 계획·설계기준의 탄력적 적용
  - 화재, 폭발, 붕괴 등 인적 재난에 대비한 방재거점 및 피난동선 등 고려하여 재난대응 종합안내도 작성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
- (건축물의 종합적 안전 점검 및 관리 기준 강화)
  - 건본주택 등 다중이 이용하지만 화재에 취약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관리·점검제도를 도입하고, 화재예방 및 화재 현장에서 재실자 안전을 위한 피난계획, 피난시설 기준 강화

- 건축물 준공 이후 안전점검을 받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대상 확대 및 건축물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화
-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범죄유발, 화재와 붕괴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절차 등 합리적 관리 프로세스 마련

### 3) 건축안전인식 향상 및 역할 강화

- (지역 공공시설과 연계한 건축안전 교육 및 홍보) 건축안전 공감대 확산을 위한 주민센터, 평생교육원, 학교 등 지역 공공시설과 연계한 상시교육을 실시하고, TV·인터넷방송 등 미디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
- (교육대상별 건축안전 프로그램 개발·활용) 건축주, 시설 이용자, 어린이 및 청소년 등 교육대상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건축주 및 발주자를 위한 건축 조성 단계별 안전 점검 행정절차, 업무 수행주체, 비용, 유지관리 방법 등 건축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건축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수칙, 안전사고 대응방법, 위험요소 발굴·신고 등에 관한 안전가이드 제작
  - 어린이 및 청소년 건축안전 교육교재 개발 등
- (건축안전 관계자 안전관리 교육 및 책임강화)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축 단계별 안전관리 사항과 절차에 대한 교육 확대
  - 건축, 기계, 전기, 소방, 구조, 행정 등 건축 업무 주체별 안전관리 주안점과 책임·역할에 대한 교육
  - 효율적인 안전 점검 및 관리를 위한 각종 안전사고 사례 및 분석 자료, 업무지침, 매뉴얼, 동영상 등 개발·보급



- 행정, 설계, 시공 등 분야별 전문인력 관리기관 간 안전교육 네트워크 구축
- 건축공정별 책임자 및 참여 기술자명을 기록하여 건축안전의 책임 의식 및 역할 강화

## ② 생활밀착형 공간복지 체계 구축

### 1)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시설 확충 및 개선

- (국공립 어린이집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국공립 어린이집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보육규모별 어린이집 표준모델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

-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 입지기준을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완

※ 미국의 어린이집 디자인 가이드라인(Child Care Center Design Guide), 영국 교육부에서는 유아학교 디자인기준(Building Handbook : nursery schools) 개발

- (생활권내 어린이집 확충) 사용자 친화적 복지를 위해 생활권내에 신축, 매입전환, 기부채납 등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양적 확충 지원

- 도심지내 노후·불량건축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거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등 유휴자산을 활용하여 어린이집 확충

- 국가 및 지자체가 주민센터, 도서관, 경찰서 등 공공건축의 신축 및 증축 시 어린이집 확충방안 마련

※ 국공립어린이집은 2011년 기준 전체 어린이집의 5%로 시설확충 필요

- (노후·낙후 학교시설 정기점검) 노후·낙후 학교시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일정수준 이하의 학교시설에 대한 단계적 개선사업 추진

- (학교시설 복합화 및 지역 커뮤니티 거점 활용) 학교 신축 시 공원, 문화·체육시설 등과 통합 설치하여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활용하여 각 세대간 격차 해소의 장 마련

## 2) 고령화에 대응하는 노인복지공간 조성 확대

○ (고령자 종합복지 서비스 시설 확대) 의료, 안전, 집단돌봄, 단체급식, 평생교육, 일자리 등 고령자를 위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

- 독거 노인가구를 위한 공동생활홈 모델을 개발하고, 고령사회·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주거-고령자 복지시설 연계방안 마련

※ 2014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는 12.7%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고령화에 따른 복지 서비스 수요 증가 (7% 고령화사회('00), 14% 고령사회('17), 20% 초고령사회('26))

※ 노인(65세 이상) 인구 약 5백만 명 대비 총 시설 수는 4,469개(138,524명 수용 가능)로 전체 인구대비 약 2.5% 수준(2012년 기준)



(일본, 유이마루이가와다니 사례) 고령자용 주택과 노인시설을 일체로 공급한 사례로 약 30㎡의 원룸타입에서 약 66㎡의 2LDK에 이르기까지 배리어프리로 설계된 다양한 주호가 상층부에 위치



(일본, 비바스니신마치 사례) 카와사키 주택공급공사와 민간병원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요양병상 85개의 민간병원과 서비스부 고령자임대주택 55호, 일반 임대주택 10호를 포함한 사례

○ (에너지빈곤층 그린리모델링 행복릴레이 사업 추진)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 복권기금을 활용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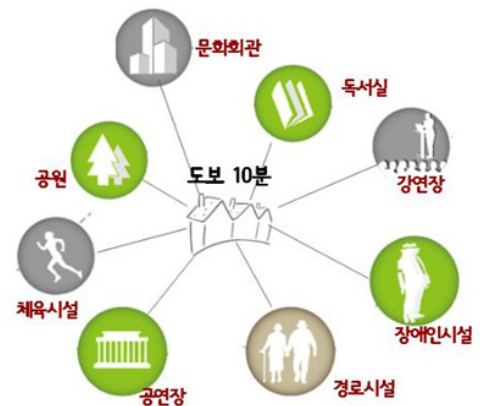
-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냉난방 환경 개선으로 혹서·혹한 환경 개선

### 3) 근린생활권 단위의 공간복지시설 통합적 연계

- (근린생활권 단위의 공간복지 마스터플랜 수립 제도 마련) 도보 생활권 공간복지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한 생활밀착형 공간복지시설 연계 및 통합 관리 기반 조성

- 근린생활권단위로 공간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통한 연차 별 공간확보 계획 마련

- 국유지종합관리시스템(기재부 통합DB)를 활용하여 저이용/미이용 국공유 공간 파악



- 도시기본계획의 부문계획으로 지자체 차원의 공간복지 마스터플랜 수립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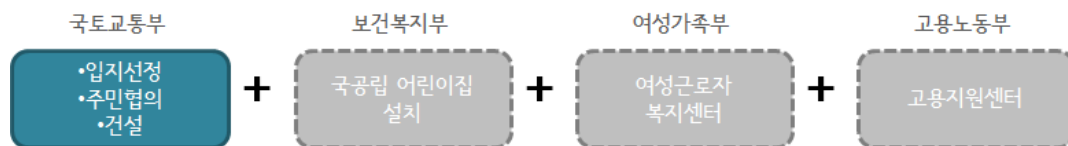
도보 근린생활권 단위 공간복지시설 연계 개념

\*자료:서울특별시(2012.11.12.))

<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3021>

- (주택공급 사업 등과 연계한 복지통합형 공간복지 시설 공급 시범사업 추진) 주택공급 및 정비 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국·공유지나 기존 공공건축물 활용형 공간복지 시설 공급

- 공공건축 리모델링 또는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 사업 추진시 다양한 공간복지시설의 연계 및 복합화를 통한 지역 공간복지 향상을 촉진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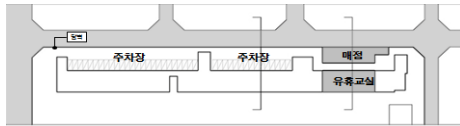


주거와 연계한 복지통합형 공간복지시설 공급을 위한 관련 부처별 협업 예시

- 주택과 시설의 연계를 통해 거주자의 편의성 증진을 유도하고 민간투자사업방식을 활용하여 공공재정의 부담경감을 도모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

### ❖ 참고1: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복지시설 조성(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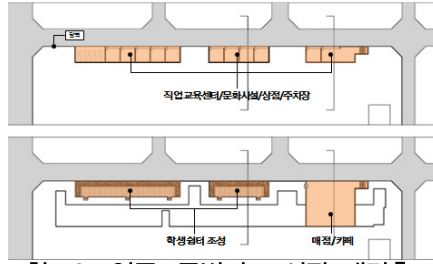
-초등학교의 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직업교육센터, 학생쉼터 등의 생활복지시설로 조성하여 활용 계획



[초등학교 유휴공간 활용 계획안]

(위: 기존, 오른쪽: 변경안)

\*자료: 기획재정부(2014), p.160



### ❖ 참고2: 영국, 주빌리 도서관 재건축

-영국의 경우, 재건축 대상 공공청사 리모델링시(전국 80%공공건축 리모델링 대상) 소규모 임대주택과 생활문화시설의 복합건물로 재건축



1. 도서관+일부 주거시설
2. 주빌리 광장
3. 상업시설 위 주거시설
4. 상업시설 위 사무공간
5. 카페-레스토랑
6. 호텔

[영국 주빌리 도서관 재건축]

\*자료: <http://www.building.co.uk/lofty-ideas-hushed-tones/3047671.article>

### ③ 건축물 리뉴얼 촉진 활성화

#### 1) 건축 리뉴얼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건축 역량 강화

- (공공건축 연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주민참여 확대)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과 연계되어 있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주민 아이디어 제안공모 확대
  - 주민들이 예산편성 등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주민공동체 권한 강화 및 주민참여 확대
  - 주민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주민 참여 증진을 위한 지침 마련 등
- (건축 코디네이터 지원 제도를 통한 주민 참여 증진)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 코디네이터 지원 제도 마련
  - 경관협정, 건축협정, 마을관리협정 등 주민협정이 증진과 주택개량 및 정비과정 등에 주민들의 자발적 공공참여 유도 강화
- (소규모 집수리 지역업체 역량 강화 지원) 지역 마을기업 또는 소규모 업체에 대한 기술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사업에 따른 주택개량 사업, 공공시설 관리사업 등에 연계
  - 주거지원센터를 통해 주택 개량 수요자와 중소 건설사 및 집수리 업체를 연계해주고 용역의 질적 관리 강화
  - 지역 업체의 지역공헌활동 연계 프로그램 마련 및 업체 간 협업 네트워크 강화 지원

- (농어촌 건축 리모델링 지원 확대) 공가 및 폐가 정비, 슬레이트 철거, 노후주택 단열 성능개선, 담장 및 지붕개량 등 농어촌 건축 리모델링 지원 확대
- 농어촌 건축 리모델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농어촌 경관을 고려한 건축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 2) 도시내 기존 건축물 유희공간 재생 활성화

- (유희공간 현황관리 체계 구축)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에 유희기간, 공실률, 방치, 압류 등 유희상태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정기 및 수시점검의 세부조사항목에 유희여부를 포함하도록 제도개선
- 도시·건축 관련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유희공간을 점검하는 항목기준을 구체화하고 GIS등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여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유희공간의 효율적 정비 및 활용의 선도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폐·공가, 공점포, 용도쇠퇴형 고층아파트 등 기존 건축물의 유희공간에 대한 창조적 재활용 시범사업 지원

### ※ 영국의 공가재생 지원 프로그램(Empty Homes Programme) 사례

- 영국 내 쇠퇴지역에 다수 존재하는 공가(2010년 기준 734,000여 호, 전체 주택수의 3%를 차지)를 재이용 상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책 프로그램으로서, 지역의 수요에 맞추어 주택을 공급하고 홈리스 문제를 해소하며 근린의 쇠퇴를 방지하고자 함(HCA, 2014)
- 2011년에 국가 주택 정책(Housing Strategy)에 2011년~2015년간 저렴 주택 지원 프로그램(Affordable Home Programme)을 통해 1억 파운드 제정지원에 대한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2015년 3월까지 최소한 3,300여 호의 공가 재생을 통한 저렴 주택을 공급할 것을 제시

### 3) 지역 커뮤니티 거점 공간 제공

- (유희공간 활용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 확충) 지역 내 공가·폐가 등 유희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여 교류할 수 있는 소규모 지역커뮤니티 거점 공간 확충
  - 지역 내 동일한 관심사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임시 커뮤니티 거점 공간 활성화 지원 (작은도서관, 공동육아공간, 장난감 대여소 등)
  - 다양한 연령층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환경 조성
- (폐교를 활용한 주민커뮤니티 공간 활용 시범사업 추진) 농어촌 지역의 인성학교 활용을 통한 주민커뮤니티 활성화
  - 농어촌 교육 전문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소규모학교 교수·학습 모델, 식생활·생태·전통문화 등 농어촌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 참고 : 강원도 평창 폐교 활용 사례 - 감자꽃 스튜디오

- 강원도 평창의 폐교(옛 노산분교)를 개조하여 문화, 창작, 교육공간으로 활용
- 감자꽃 스튜디오 건물은 도서관, 박물관, 식당, 사무실, 강당, 관사 등의 공간으로 구성됨
- 주민, 청소년,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행, 지역 생태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기획 등의 지역 연계사업 실시



\*자료: 평창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http://www.yes-pc.net/>)



## 목표2.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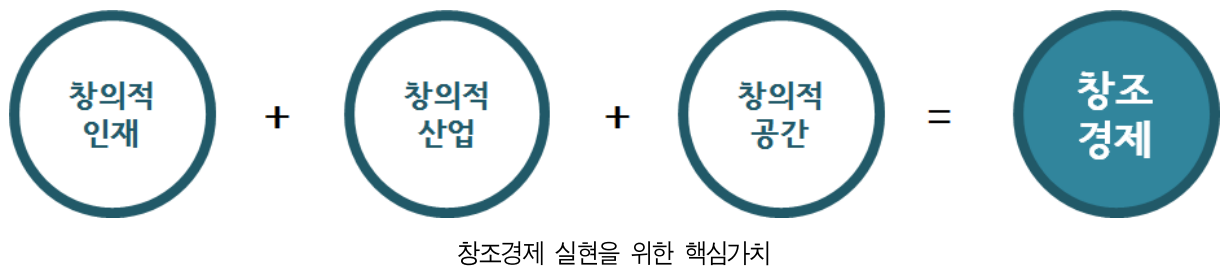
### □ 추진배경

- 건설이 성장을 주도하는 시대에서 건축이 성장을 주도하는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
- 기존 대량생산체제 운용에 따른 물적 토대를 기반으로 국민의 다양한 계층 및 요구에 부응하는 다품종·소량생산체제의 전환과 점진적 맞춤형 개발 유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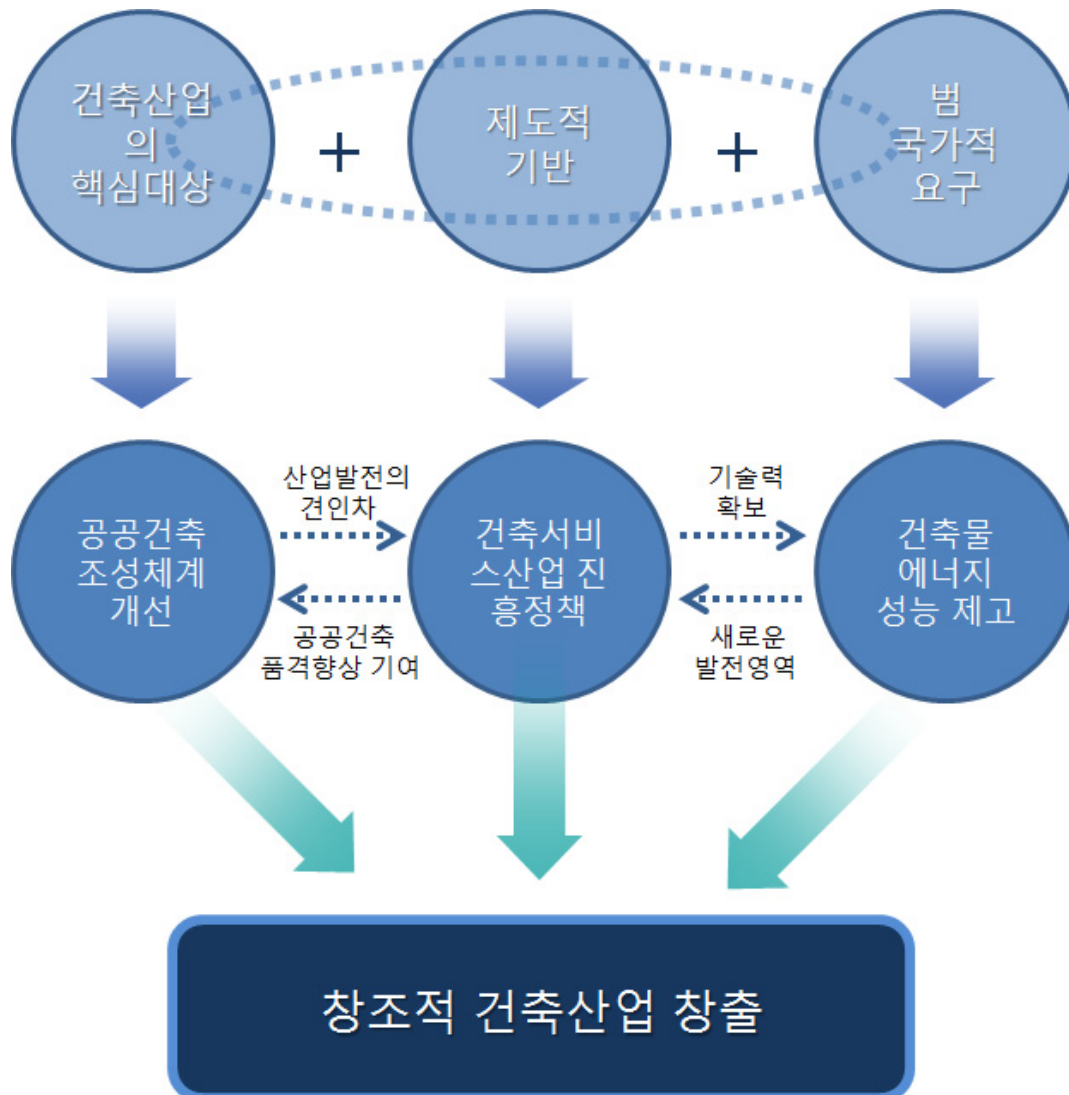
○ 건축은 창조경제의 공간적 토대

- 건축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가 일반 제조업보다 각 1.4배, 1.9배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
-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건축산업의 중요도 부각에 따라 건전한 시장구조 형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요구 증대



○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역할 요구 증대

- (핵심 대상으로서의 공공건축) 공공건축은 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영역이자 건축산업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
-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14.06) 시행으로 건축산업을 지식기반서비스산업으로 진흥하기 위한 관련 정책의 기반 마련
- (범 국가적 요구 대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범 국가적 핵심과제로 건축물 에너지 성능 제고를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



## □ 추진방향

### ① 공공건축 조성체계 개선을 통한 공공예산의 효율성 제고 필요

#### ○ 공공건축은 국공유 재산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

- 국유재산 총액(309.6조원, 2008년 기준) 중 건물재산은 약 35조이며, 지자체 공유재산(246조, 2006년 기준) 중 건물재산은 24조로 국·공유재산의 약 10%를 공공건축물이 차지

※ '13.05 현재 공공건축물은 약 15만동이며, 매년 약 6천동의 공공건축물이 신축

- 공공건축물은 주민자치센터, 구청, 보육시설, 학교, 복지관, 도서관 등 일상적으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임
- 시설 대형화 및 시설중복 등 예산낭비, 권위적이거나 획일적인 형태로 인한 도시 이미지 형성 지장 등 공공건축의 문제점 상존
- 기획업무 부실, 관리주체의 전문성 부족, 조성 프로세스의 성과평가 체계 미흡 등 공공건축 조성체계가 문제점의 근본적 원인

(공공건축 효율화) 국·공유재산 및 공공예산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공공건축물의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

- ☞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세부실천과제 중 1-1-3(공공부문 디자인 향상을 위한 기반강화), 1-2-1(공공건축 디자인 쇄신) 과의 지속성 확보
-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사업계획사전검토 강화, 공공건축지원센터, 설계발주제도 개선 등 법제도 개선의 실효성 제고

## ② 창조경제 시대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필요

-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편의 등을 좌우하고, 국민 삶의 수준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
-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건축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해외진출 지원, 기술 혁신, 전문지원기관 설치,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 설계 경쟁력이 OECD 27개국 중 20위권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 필요
- 건축설계산업을 지식기반서비스산업으로서 육성하고 공공건축의 품격향상 및 효율화를 위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14.06)
- 정부(국토교통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14.01)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건축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방안’ 발표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인 건축서비스산업을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열악한 건축서비스산업 시장환경 개선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

- ☞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세부실천과제 중 2-4-1(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마련) 과의 지속성 확보
-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정책의 조기정착 추진
-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 계획’의 방향 제시

### ③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 필요성 증가

-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는 최근 10년간 약 34.6% 증가하였고, 건물  
부분의 에너지 소비량도 지속적으로 증가
  - 선진국으로 갈수록 건축물의 쾌적성, 편리성에 대한 요구 증가로 건물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
- 해외 선진국들은 건물부분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녹색건축물 정책을 시행 중
  - 미국, 일본,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선진국은 에너지성능지표에 의한  
건물에너지총량제를 비롯한 건축부위별 성능기준을 운용 중
- 우리나라도 2020년까지 건물부분 온실가스의 배출전망치(BAU) 대비  
26.9%까지 감축하는 목표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위한 추진기반 마련 필요
- 녹색건축은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과 감축 비용을 고려할 때, 가장  
효율적인 정책 수단으로 건설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
  - 미국과 유럽에서의 녹색건축 관련 투자는 350만 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  
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을 고려하면 잠재력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

(녹색건축 실현) 총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25%를 차지하는 건물부분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

-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 정책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  
유도
- ☞ 제1차 녹색건축물기본계획의 4대 추진전략 중 전략 1, 2, 3과의 정합성  
확보 및 추진기반 마련

## ① 공공건축 효율화

### 1) 공공건축 프로세스 체계화

- (공공건축 사전기획업무 강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사전검토 대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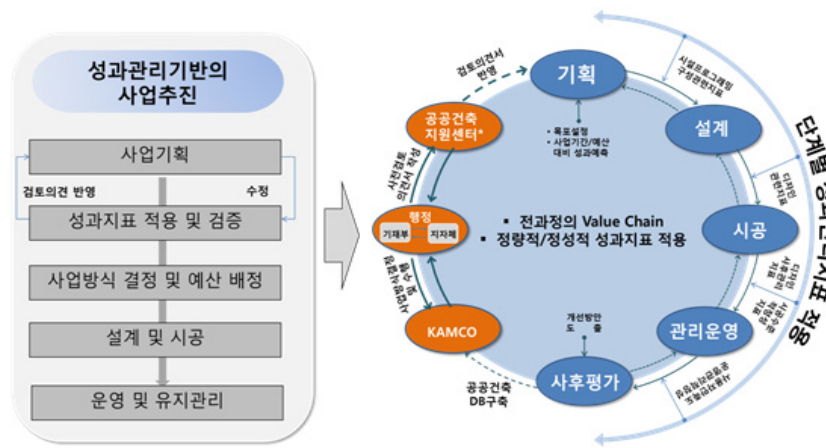
※ 현재, 추정설계비 고시금액 이상의 공공건축물 사업에 적용(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 실시 사업, 공장·발전시설·군사시설 등 용도건물 제외)

[표]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사업

총 공사비(억원)	2011년기준	검토제도		
1,000 ▼	13건	예비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500억 이상 재정지원 300억 이상	타당성 조사	사업계획 사전검토 면제
500 ▼	35건			
200 ▼	103건			
100 ▼	119건		총사업비 500억 이상 건축비 100억 이상	
50 ▼	257건			
0 ▼	11,347건			
				우선적용
				확대적용

\*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4), 아우리 브리프 No.92

- 전체의 약 95%를 차지하는 설계비 고시금액 이하 중소규모 공공건축물(주민센터, 보건소, 영유아시설 등)에 대한 사전검토 확대 적용
- (공공건축 성과관리체계 구축) 공공건축물 기획단계에서 이용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조성 프로세스의 총괄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투융자심사, 사업계획사전검토, 총사업비 관리, 사후평가 등 기존 개별적 평가·관리제도의 연계
  - 기존 공공건축물 현황정보체계 고도화, 상시적인 관리·활용 실태 진단체계 마련 등 공공건축 활용성 증대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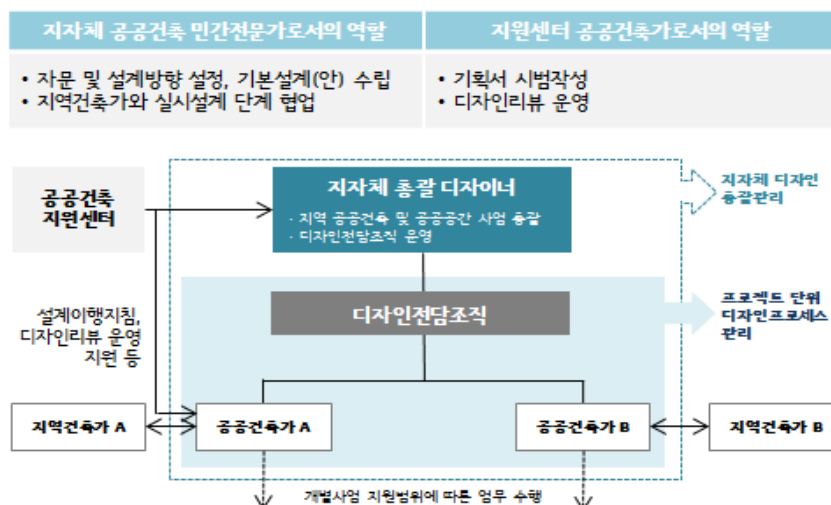
(그림) 단계별 성과관리 프로세스 적용 프로세스

- (공공건축 조성 업무의 총괄조정체계 구축) 국토부, 안행부, 조달청, 기재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국가 공공건축 제도 및 조성 정책의 연계 및 조정
- 공공건축물 발주에 관한 통합 기준 및 가이드라인, 일원화된 정보 체계 마련 등 통합 관리체계 구축

## 2) 발주기관의 전문성 강화

- (지역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확대) 공공건축 전담부서가 부재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공공건축가 지원

※ 영주시, 서울시, 포항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건축 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관리를 수행하는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운영 중



(그림) 공공건축가의 역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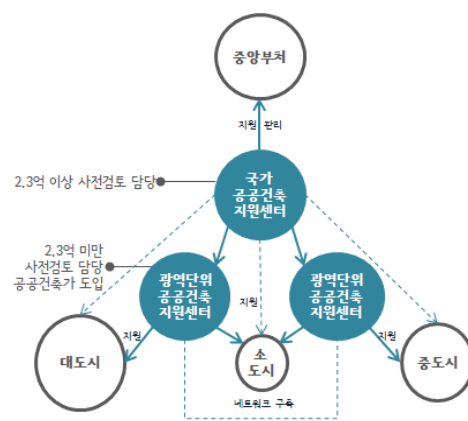
- (공공건축 업무 지원체계 강화) 발주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및 예산 신청 등에 대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지원·대행 기능 확대
  -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기획업무를 별도 용역으로 외부 위탁할 수 있도록 용역 발주근거 마련
  - 공공건축 관련 업무 수행 부서의 건축 전문직 채용 의무화 또는 외부전문가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확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광역단위의 공공건축 관리체계 강화
  - ※ 현재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건축도시공간연구소만이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되어 법정업무 수행 중
  - 중장기적으로는 광역 단위로 공공건축 지원센터를 설립·지정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각종 지원업무 수행

❖ 참고: 광역단위 공공건축 지원센터(안)

(예시)광역단위 공공건축 지원센터의 주요지원 내용

- 지역현황 분석을 토대로 사업필요성 판단 및 자문
- 적정 입지선정, 시설용도계획, 시설 규모 및 프로그램, 예산계획에 대한 자문 및 지원
- 발주방식 결정에 대한 자문 및 설계 용역 계약에 관한 지원설계 및 시공 수행계획에 대한 자문
- 디자인·경관계획에 대한 자문·지원
- 유지관리 계획에 대한 자문

(예시)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광역단위 공공건축지원센터 네트워크



- (지자체 공공건축 발주부서의 전문직 확대) 지역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등을 임시직 또는 별정직으로서의 건축사 채용 기회 확대

- (건축설계용역 및 건설공사 예산책정 지원체계 구축) 공공사업 수행 시 전문성이 미흡한 발주기관의 예산책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 2]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 1) 건축서비스업무 조달시장 선진화

- (기술력과 창의력 중심으로 설계자 선정방식 전환) 가격 중심의 기존 발주제도를 능력평가 중심으로 적격심사 입찰방식 개선
  - 국가·지방계약 법령에 건축서비스 분야를 별도로 명시하고 건축 서비스에 적합한 계약제도 마련 (건설기술과 분리)
  - 건축물 안전 확보, 건축사 책임강화 등을 위한 건축사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개선, 발주기관의 기준 준수 강화
  - 설계용역에 대한 사전사업수행능력평가(PQ) 시 신용평가 항목은 폐지하거나 설계업체의 특성에 맞는 신용도 평가기준 정비
-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 강화) 명확한 계약에 근거한 설계진행과 주요 의사결정 과정 명문화
  - (표준계약서 제정) 설계 단계별 업무에 따른 다양하고 합리적인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급
  - (설계 단계별 업무 및 행정절차 명확화) 무원칙적인 변경 없이 각 단계(기획,중간,실시)별 규정된 업무가 명확하게 수행되고, 각 단계별 결정사항이 명문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 마련

- (적정 보상비 책정 의무화) 제공되는 설계서비스에 부합하는 적절한 설계비 지급
  - 설계도서 납품 후 설계변경에 대하여 예산 책정 및 대가 지급
    - ※ “건축설계변경”을 정의하고, 예산 책정, 대가 지급 방법 구체화
  - 현행 공사비요율방식 개선 및 실비정액가산방식 도입을 통해 투입 인원과 비용(Cost & Fee) 근거의 설계비 산출제도 확립
    - ※ 도로, 철도, 항만, 하천, 댐 분야는 실비정액가산방식 기준 도입(2012년)
- (건축 엔지니어링 업무 계약체계 개선) 구조, 조경, 기계, 전기 등 건축 엔지니어링 업무의 책임과 권리 강화를 위한 계약체계 개선
  - 건축설계용역 계약 시 건축설계사무소와 구조, 기계, 전기, 조경 등 관련 엔지니어링 분야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계약 체결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건축엔지니어링의 정의와 대가 지급, 공동계약 등 건축엔지니어링의 법적 정의 등을 명확히 규정

## 2) 민간 건축시장 거래환경 개선

- (공정한 거래를 위한 계약제도의 합리적 개선) 설계 수행시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전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분쟁의 소지를 1차적으로 예방하고 건축사의 책임 강화
- (건축사 업무범위 다양화) 건축주와의 계약에 따라 건축설계 업무의 종류 구분

예) (A타입) 인허가 등 건축행위를 위한 법정 행정업무만 수행  
 (B타입) 설계부터 시공 후 사용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건축 전과정을 책임지고 수행 (건축사는 전문가책임보험에 가입 민사 책임 강화)

- (엔지니어링 분야 책임 강화) 건축물 설계도면과 관련 서류의 작성자(건축사, 기술사 등)가 수행한 업무(구조, 설비 등)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는 제도 도입

※ 건축사의 책임을 전제로 건축사가 구조, 설비 분야 도면 작성도 가능

### 3) 창조적 인력 양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

- (대학교육 제도 개선) 5년제 건축학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무 중심의 교육환경 제공

- 실무에 필요한 기준 등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학교에서 배운 것이 실무에서 바로 적용되도록 학교와 실무의 코디네이션 강화

※ 예) 발주제도, 건축법규, 설계비 책정과 건축 기획 등도 교육 필요

- 설계와 구조, 설비 등 건축 분야간 활발한 교류를 위해 5년제 건축학과와 4년제 건축공학과 사이의 교류 확대

- 건축사 자격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합격률도 의사국시 수준으로 개선

※ 해외(미국)의 경우와 같이, 수시로 각 과목별로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도입 검토

- (마을단위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마을건축가 제도를 활성화하여 건축 문화 기반의 지역재생 추진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마을단위 건축서비스 관련 1인 기업, 아틀리에, 벤처기업 등 육성

※ 업종별 기술교육 및 경영 컨설팅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원

- 신진건축사상, 젊은 건축가상 등을 수상한 전문가가 마을건축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설계 및 시공감리 수행 기회 확대

- 마을건축가 육성 프로그램 운영

※ 공공정책 및 사업 체계, 행정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제고와 갈등관리, 주민참여 설계기법 등

- (건축전문가 국제 경쟁력 강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확립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해 해외진출  
역량 강화

- 건축물 설계와 관련된 모든 규정을 “한국 건축설계 규정 (KBC)”으로 통합하여, 사용자 편의성·효율성 확보

※ 장기적으로는 건축 관련 규정의 합리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세계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

- 시설물별 자재 및 시공방법을 규정하는 건축기준 방식에서 시설물에 대한 성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선

- 해외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건축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해외로의 진출을 감안한 전문가 책임 보험제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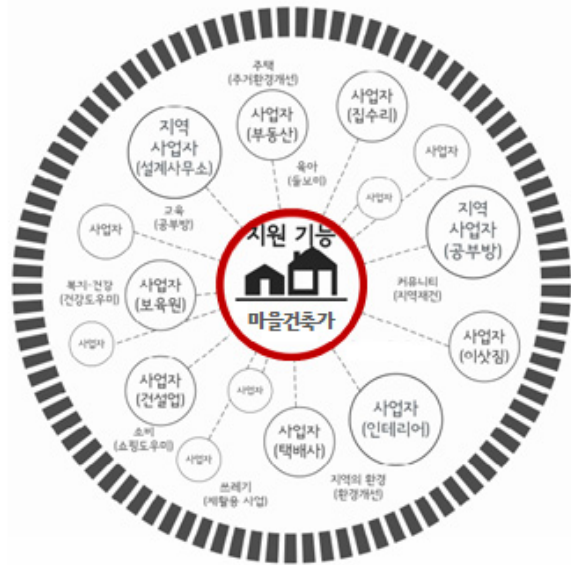
- 해외 진출 희망 건축사를 대상으로 기 운용되고 있는 해외진출 전문 교육 확대 및 관련 기관간 연계 강화

- (개발도상국 건축시장 개척 추진) 주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건축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 KOICA 건축전문가 확대 및 건축 전문인력 파견(해외봉사단) 강화 등 개발도상국 건축전문가 파견을 통한 해외사업 발굴 기반 강화

- KSP(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 Knowledge Sharing Program-기재부) 사업에 건축·주택관련 전문가 파견으로 해외사업 발굴기반 강화

- 국토부가 추진 중인 개도국 인프라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에 건축산업을 패키지로 결합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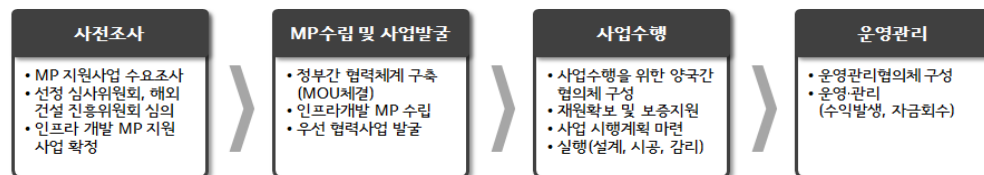
[그림] 마을단위 건축서비스산업 생태계

\*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3), 건축문화기반의 도시재창조와 신산업 발굴, 내부자료, 참고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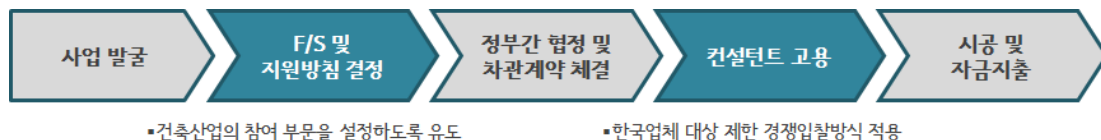
※ 마스터플랜 수립 시 도시설계와 건축부문을 포함시키고, 사업시행계획 마련 및 실행단계에서 건축산업의 참여 진행

❖ 참고: 개도국 인프라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

-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국가의 인프라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 지원(2013년 3개 사업, 2014년 7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당 5억~10억 지원)
-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은 마스터플랜 등 소프트 인프라와 후속 세부사업인 하드 인프라 수주를 연계시키는 사업방식
- 정부 대 정부(G to G) 차원의 개발협력에서 출발하여, 향후 정부 대 민간(G to B) 차원의 구체적 협력 및 사업 참여 등으로 진행
- 필요시 종합계획 수립 후에도 우리 기업의 사업수행과 운영관리 단계에서의 기술·금융지원 등을 지속 추진



- EDCF사업 초기단계인 F/S단계에서 건축산업의 참여 부문을 설정 하도록 하고, 건축물 설계 등 컨설턴트 과업에 국내업체 대상 제한경쟁입찰방식 적극유도



[그림] EDCF 사업과 연계

-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건축관련 발주사업 정보 체계화 및 KOTRA 건축 관련 시장정보 지원 협력을 통한 수주 경쟁력 향상

### ③ 녹색건축 실현

#### 1) 녹색건축물 기준 선진화

- (국민체감형 녹색건축 기준 마련) 2020년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녹색건축에 의한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
  - 단열성능을 선진국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주택의 냉·난방 에너지 90% 절감 유도
  - 업무용 건축물의 냉방에너지 절감을 위한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주거용 건축물로 확대
  - 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에너지소비 총량제를 '1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유도를 위한 관련 제도 및 기준 정비
- (공공부문 녹색건축 선도)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민간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녹색건축시장 선도
  - 신축 공공건축물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대상을 3천㎡ 이상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고, 공공건축물 에너지효율 평가제도 도입
  -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을 마련하고, 저효율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추진
  - 고등학교 및 대학 도서관 등 교육시설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그린스쿨 사업 등 기존 사업과 연계 추진
- (녹색건축 설비 및 시공 품질 강화) 에너지절약 설비시스템 설계 기준 및 커미셔닝 표준절차·검증기술 개발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선방안 연구 및 개정 추진
- 그린 BIM 라이브러리 및 템플릿 개발·보급을 통해 BIM 기반의 녹색건축 설계 활성화 유도
- 빌딩 커미셔닝 절차를 표준화하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 및 녹색건축 인증제도에 빌딩 커미셔닝 의무화 도입

## 2)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건축물 정보, 민간 금융, 저비용·고효율 기술을 연계한 한국형 그린리모델링 추진체계 구축
  - 그린리모델링 이자비용 지원 사업 등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 구축 및 확대 추진
  - 지역 녹색건축 기금 설치·운용을 통해 그린리모델링 재원 확보
  - 정비사업 시행 시 아파트 단지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의무화 하고 노후 단독주거지는 냉·난방 에너지 제로를 유도
  - 에너지 소비량 공개와 온실가스 감축량 거래제 활성화를 통해, 자발적 에너지 성능개선 및 사업성 개선을 유도
- (기존 건축물 관리 및 인증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 에너지 효율에 대한 사후관리 및 인증제도 정비
  - 건축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지속적 운영 지원
  - 사용 승인 후 건물 에너지 진단·평가 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



### 3) 녹색건축 산업육성

- (녹색건축 전문기업 및 전문인력 육성) 녹색건축 관련 전문기업 4만여 개 지정 및 육성, 약 45만 명의 일자리 확보
  - 친환경자재, 신재생에너지 설비·시공,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물 진단·평가·컨설팅 등 녹색건축 전문기업 등록 및 관리체계 구축
  - 건물에너지 평가사를 국가자격으로 승격하고 역할 강화
  - 녹색건축 인증 전문가 제도 도입 및 인증업무 담당 인원 충원
  - 녹색건축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건축, 기계, 설비, 전기 분야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녹색건축 인력 전문양성기관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 (녹색건축물 운영관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건축물 운영관리 효율 향상을 위한 BEMS 기술 개발 및 보급
  - BEMS 국가 표준 고도화 및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추진
  - 공공건축물 및 목표관리제 대상 건축물에 BEMS 도입 지원
  - 녹색건축물 운영관리 업무지침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개별 건축물 단위로 구축되는 BEMS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역 단위 통합에너지 관리센터를 지자체와 연계 구축

## 목표 3. 건축문화 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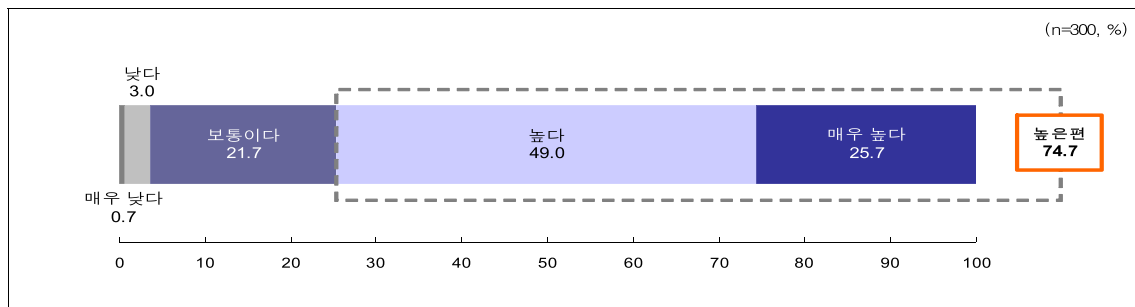
### □ 추진배경

#### ○ 건축은 문화이자 국가경쟁력의 토대

- Anholt-GfK의 국가브랜드(nation brand index 2013) 순위 :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이태리, 스위스, 호주, 스웨덴 순

※ 안홀트의 도시브랜드지수는 도시의 장소성, 건축 수준(매력도)가 중요한 측정지표로서 브랜드 순위가 높은 대부분의 국가가 건축정책을 추진

-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300인)으로 국가 이미지 형성에 건축물 및 도시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74.7%가 높다는 응답



#### ○ 고유한 건축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

- 주택수요자들의 한옥선호도는 매우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과 성능이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여 대폭적인 정부의 지원 필요
- 전주한옥마을, 서울 북촌 등 한옥의 보전 및 활용에 성공한 지역을 모범으로 건축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브랜드 가치 및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는 흐름이 전국적으로 확산 중

○ 개발에서 관리로 국토정책 패러다임 전환

- 과거 효율성·경제성을 중시한 공급위주의 대규모 개발은 자연환경의 훼손 및 획일적 도시경관을 창출하여 국토경관의 품격저하 초래
- 최근 국토정책 패러다임은 대규모 개발보다 보존, 재생, 활용 등의 관리·개선정책으로 전환되면서 국토경관 관리필요성 증가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쾌적한 국토경관 요구 증대

- 경관은 국민의 공동자산으로 쾌적한 경관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은 국가의 책무
- 다양한 복지가 요구되고 사회보장정책의 개편·추진됨에 따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기본권 보장 필요

※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시행('13) 및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14)

- 우수한 경관이 국토의 매력을 증진시키는 국가경쟁력 강화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경관의 사회·경제적 기능 재발견

※ 최근 도시경쟁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공간 환경에 대한 질적 평가가 시도되는 경향

○ 통일 한국의 미래상 모색 필요

- 남북관계에서 건축도시분야의 통합은 대규모 사회기반시설과 같이 물리적으로만 연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사회, 문화적인 총체적인 이해와 동질감을 형성하여야만 가능
- 최근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전시, 출판 등의 작업은 북한이해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나, 기존의 남북협력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단기적 실행방안과 동시에 장기적 추진과제들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

※ 세계적인 건축전시회인 베니스비엔날레에서 2015년 한국관은 남한과 북한의 건축 100년을 비교하여 소개하여 최고국가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음

## □ 추진 방향

### ① 지역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

-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의해 철거되고 있는 좋은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및 국가의 브랜드 가치 향상 가능
- 전국 건축자산의 통합관리를 통해 규모와 가치를 파악하고 수리 및 증개축 이력을 관리하며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
  - 한옥, 근대건축물 및 건축관련 수상작 등을 중심으로 건축자산 정보를 DB화하여 중점 관리하고, 수리이력을 기록하여 유지관리를 지원하며, 권역별로 건축자산센터를 지정하여 인력 양성 및 활용 증대
- 저렴하고 대중적인 한옥 유형을 개발하여 체험 기회를 늘리고 한국적 공간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 필요
  - 다층 고밀도 한옥 유형 개발 및 한옥형 공공건축물 건축 유도, 한옥의 공간요소를 현대화하여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 가능
- 다양한 건축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건축문화의 가치를 발굴하여 관광산업의 기반으로 활용
  - 초,중,고 제도교육에서 건축문화교육 시행 및 지역 맞춤형 건축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 진흥 필요
- 2015년 6월 시행 예정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차 건축자산기본계획’의 효과적 추진 지원

(고유의 건축문화) 한국의 고유한 건축물 및 경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브랜드 가치의 극대화 추구

☞ 수립 중인 ‘제1차 건축자산기본계획(’15)’의 핵심사항 반영

## ② 국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국토경관 실현

- 삶의 질적 향상과 직결된 경관에 대한 관심은 증대하는데 비해 경관가치 및 관리에 대한 국민인식 수준은 낮은 실정

※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토경관에 대해 81%가 '전반적으로 아름답다'고 응답. '자연경관'은 60%가 아름답다고 한 반면 '도시경관'에 대해서는 68%가 열악하다고 응답.(2014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경관형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데 반해 경관관리에 대한 의지는 미약. 주민이 주도하는 경관협정사업은 2007년 이후 12개소에 그치고 있으며, 경관사업 시행 시 참여의지는 낮음

-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경관관리 관련 연구기반 및 기술력 등의 경관관리 기반이 미약
  - 경관관리를 위한 행정력의 전문성 강화와 실효성 있는 경관심의 수행을 위한 민간전문가의 역량 강화 필요
  - 경관 관련 기초연구 수행, R&D 추진 등을 통한 경관인식 제고 및 경관기술 개발 등 기반 마련 시급
- 국토경관의 체계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국토경관 가치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국민 공감대 형성, 경관관리 기반구축, 내실 있는 경관관리 제도 개선 필요
- 정부(국토교통부)는 2013년 「경과법」을 전면 개정하여 국가차원에서 국토경관 정책방향 설정 및 실행을 위한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국토경관 향상) 경관가치에 대한 국민인식 확산 및 체계적인 경관관리 기반구축을 통한 100년을 내다본 국토경관 실현

☞ 기 수립된 '경관정책기본계획('15.04)'의 핵심사항 반영

### ③ 통일 한국 건축 비전 제시

- 통일관련 대비는 오랫동안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서 준비되어 왔으나 건축 분야에 있어서는 국지적 개발사업에 한정된 측면이 있음
  - 주로, 통일이전에 개성공단개발사업, 철도·도로연결사업, 금강산 관광개발 등의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나 SOC공급방안에 대한 의가주를 이루고 있음
- 건축문화의 측면에서 남북 공동연구를 통해 민족 동질성을 확인하고 통일 이후의 건축자산 관리방향에 대한 논의 필요
  - 비교적 이념문제에서 자유로운 문화재복원과 관련하여 금강산 내 사찰복원 사업에 협력사업이 이루어지는 등의 활동이 진행되었고, 최근 개성역사유적지구 내 남북 공동 발굴조사 등 진행
  - 이를 확장하여 남북 공동 건축자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 등을 협력 가능
- DMZ 공동 개발사업 등 실현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건축도시의 발전방향을 모색
  - 남과 북이 점점을 이루고 있는 DMZ를 대상으로 구체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미래도시의 비전을 강구

(통일 한국 건축 비전) 남북 공동으로 즉각 추진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통일 한국의 건축의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

## ①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 창달

### 1) 건축자산의 가치 증진

- (건축자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도에서 구축하는 건축자산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운영

#### ※ 건축자산 DB의 범위

- 지정 및 등록 문화재 외에도 건립된 지 20~30년 경과된 건축물과 우수건축물 등 최근 주목받는 근현대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자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정부나 지자체가 등록하여 관리하는 건축물외에도 지역적인 명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나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는 건축물을 목록화하여 관리
- 신축 건축물이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DB가 업데이트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규모, 기능, 구조별 건축자산의 수리·관리 지침과 유지관리 매뉴얼 개발 및 건축물 보전·관리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건축물 수리 이력에 대한 기록 구축
- 건축물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건축자산의 부분·구성 요소별 유지보수 시한을 예측하고,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예방적 시스템 구축

※ 건축자산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높은 빈도수를 보이는 보수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기술적 대응

- (권역별 건축자산센터 지정) 권역별로 공공기관 혹은 대학·협회를 중심으로 건축자산센터를 지정·지원하여 지역 건축자산을 발굴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전문가 양성 및 유지관리 체계 구성
- 전통 건축자산 외에도 근현대 건축자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지역전문가 양성

※ 지역 건축자산을 관리하고 새로운 건축자산 발굴·평가·지정 및 통합관리시스템에 지역 건축자산 정보 등록업무 수행

- 민간 차원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 건축자산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역 건축사와 목수 등을 활용한 리모델링과 수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수립

## 2) 한옥문화의 브랜드화

- (국민 공감 한옥 유형 개발) 생활밀착형 한옥 유형을 개발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체험·생활 가능한 한옥 공간의 보급
- 적정 성능을 갖춘 소재, 부품의 개발과 함께 국민의 정서와 미감에 부합하는 합리적 디자인을 연구·개발하여 현대 주생활에 적합한 고밀도, 다층 복합용도의 보급형 신한옥 모델 구축
- ※ 경쟁 주택유형의 건축비를 고려해 적정한 단위면적당 건축비를 설정하고 이를 만족하는 신한옥 모델을 연구·개발
- 역사도시에 적합한 신한옥 모델, 도심재생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신한옥 모델, 중소도시, 신도시 개발 등 공간적 특성에 따른 모델 개발 및 보급
- 한옥 공공건축물, 마을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최적화 모델 개발을 위해 한옥형 공공건축물의 법적 정의와 요건을 마련하고 한옥형 공공건축물의 건축과 지원에 관련된 법규와 규정, 기준 개정·제정



경상북도 신청사 조감도(출처 : 경상북도청)



혜화동사무소(출처 : <http://photolog.blog.naver.com/>)

- 한옥에 적합한 종합적인 기준 및 평가 방법이 부재하며, 한옥을 다양한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성능·재료·형태 및 한옥마을 규모·밀도·배치 등에 관한 기준 마련



※ 한옥이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옥의 유형, 등급 (품격·품질)을 다양하게 제시

※ 한옥의 특성을 고려해 평가 단위(대상)를 부재, 부위, 건물, 가로, 마을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하고 객관적인 실험 혹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준 설정

○ (한국적 공간 브랜드화 지원) 다양한 층위에서 ‘한국적 공간’에 대한 개념 정립과 디자인 매뉴얼 제작

- 한옥의 고유한 공간 요소인 ‘마당’, ‘대청’, ‘담’ 등 브랜드화

※ 2011년 영국 첼시플라워쇼에서 황지해 작가(환경미술가그룹 뭉)가 ‘해우소’를 출품해 Artisan Garden 부분에서 금메달을 수상한바 있으며<sup>3)</sup>, 한국적 공간 요소의 브랜드화 및 홍보를 위한 전략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



해우소(2011년 첼시 플라워쇼 출품작)

※ 한국적 공간의 다양한 층위와 사례

- 단위 공간: 대청, 마당, 응접실(사랑방) 등
- 인테리어: 공공공간의 실내, 공연예술 무대, 역 구내 등
- 건물: 다양한 용도와 의미를 지닌 한옥, 자연 혹은 다른 유형의 건물(공간)과 결합되는 방식 등
- 외부공간·조경: 광장, 외부공연장, 경사지 처리·활용 방식, 사인·조형물 등
- 가로: 건물군과 길 체계, 중간 영역 등
- 마을: 공동체 영역 등
- 도시: 한국적 신도시 등

- 한국적 공간을 디자인 하는 전문 디자이너 교육 및 육성

※ 한옥설계 전문과정의 확장으로 한국적 공간 디자인 전문과정 교육 프로그램 운용

3) 출처(글, 그림) : 라펜트(2011.5.25.), ‘황지해 작가, 한국 최초 첼시플라워쇼 금메달’

- 고유 건축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 브랜드 마케팅을 위해 정부부처 관계자 회의 및 워크숍 정례화
- 다양한 층위의 우수한 한국적 공간 사례에 대한 시상 및 국내외 순회 전시·설명회, 현장 답사 프로그램 진행
  - ※ 전국의 우수한 한국적 공간을 네트워크화 하여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국내외에 홍보
- 건축박람회, 정원 박람회 등 고유건축문화 브랜드 작품 출품을 위한 지원책 마련

### 3) 건축문화 교육 및 홍보 확산

- (건축문화 교육 프로그램 다변화) 건축교육을 담당하는 기구 및 제도를 정비하고, 제도 교육과 일반인 교육 프로그램 다변화
- 건축교육 통합네트워크 역할을 담당하는 전담기구 설립·운영 및 지역별 전문센터 설치
  - ※ 영국의 공간환경교육 통합네트워크(Engaging Places), 미국의 건축과 디자인 교육 네트워크(A+DEN) 등 지역별 건축교육 전문기관 운영
- 초·중·고등학교 제도교육 교과목에서의 건축·도시 관련 내용의 콘텐츠 개발과 주기적 점검 및 수정 보완 체계 마련
  - ※ 효율적인 건축교육 시행을 위한 전문가 활용 및 담당교사 교육, 관련 학과 도우미 제도 등 교육지원체계 제시 및 시범운영

- ‘UIA 공간환경교육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초건축교육의 국제 기준을 제시
- 미국은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ETCA(Educating Children Through Architecture) 프로그램 운영
- 영국은 London Open House, Kent Architecture Center 등에서 학생들과 교사가 참여하는 건축기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교육 진행
- 핀란드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의 건축교육에 사용되는 교육교재를 발간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구조와 건설, 공간과 재료, 차원과 비례·형태, 구성, 빛과 색채, 우리의 주변 환경과 문화유산 등을 포함

- 지역주민과 동네건축가 등이 함께하는 일반인 대상 기초건축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주민 참여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마을만들기, 마을미술프로젝트 등 지역별 현안사업을 고려한 건축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관련기관의 제도적·인적·재정적 지원과 정책 추진 필요

- 일본건축가협회(JIA)에서는 JIA관동지부 리빙 디자인 센터 OZONE을 구성하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건축가가 매월 다른 테마에 따라 강좌하면서 주거를 구입하고 관리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건축가와 생각하는 주택 짓기'프로그램을 진행
- 일본 국토교통성은 경관마을 만들기 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환경 및 경관에 대한 기초적 교양을 습득하고 가이드라인 및 모델 등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경관마을 만들기 지원사업'프로그램 진행

- (건축문화 기반 관광산업 육성) 건축문화를 관광산업의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맞춤형 홍보와 특화된 숙박시설 제공

-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건축물을 소개하여 시민이 쉽게 찾아가고 즐길 수 있는 건축문화지도 제작

※ 서적 발간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국제적으로도 국내 우수건축물에 대한 홍보 강화

※ 점적으로 개별 건축물 소개에 그치는 홍보는 지양하고, 투어방법(버스, 보행, 자전거) 및 관광대상(문화재, 공원, 우수건축물)을 연계한 다양한 홍보전략 개발

-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숙박 시설 유형 개발

※ 내외국인들이 전통문화의 체험과 함께 숙박시설을 통하여 지역특성 체험이 가능하도록 상업시설이 아닌 문화콘텐츠 차원에서 접근

- 지역 건축문화자산을 공공시설·설치물 등의 디자인과 연계한 디자인 공모전, 수상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장려

※ 건축·공간환경이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지니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가 요구되며 건축상 수상 시 시민투표 등을 통한 일반인 참여 확대

- (건축도시박물관 건립) 건축도시박물관 건립으로 새로운 형태의 교육, 전시, 홍보, 연구, 수집 등의 중심지 구축
  - 박제된 유품을 보관·정리하는 박물관에서 탈피하여 지나온 경험과 축적된 자료를 새로운 가치로 재생산하는 건설사적 보고와 문화사적 발신기지로서의 위상과 기능 구축
  - 건축체험센터를 지역별로 지정하여 학생, 시민, 전문인력 등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
    - ※ 멀티미디어 장비 및 인터랙티브 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축 및 도시에 대한 생생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콘텐츠 개발
  - 건축도시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점차 멸실·폐기되고 있는 자료를 수집, 보존, 평가함으로써 건축문화 연구기반 마련
    - ※ 도시건축분야의 기록보존소 건립은 세계적 추세이며, 이는 학문발전 및 산업역량 강화를 넘어 정체성 확립과 문화수준 향상, 국제적 인지도 확보를 위한 주요 전략

#### 스웨덴 건축박물관

- 스웨덴 건축박물관은 설립이후 약 500명이 넘는 건축가들로부터 모형, 그림 등 약 300백만개의 다양한 건축 관련 작품을 보관해오고 있으며, 이 외에도 50만점의 사진작품과 2000여개의 모델을 기록보관소에 소장
- 매년 다양한 작가 및 사진가와의 협업을 통해 상업목적이 아닌 교육활동 목적의 건축·디자인 관련 책자를 간행
- 또한, 디지털 뮤지엄을 통해 건축·공간 환경에 대한 시각자료를 구축하고 이용자들에게 정보제공

#### 국외 건축박물관 관련시설

건축박물관	도시홍보관	건축아카이브
네덜란드 건축관(NAI), 스웨덴 건축박물관, 독일건축박물관(DAM), 프랑스 건축 및 문화유적 박물관, 스코틀랜드 라이트하우스, 영국 왕립건축가협회, 핀란드 건축박물관, 이탈리아 21세기 국립예술박물관(MAXXI), 캐나다 건축센터(CCA), 미국 국립건축박물관(NBM), 에도도쿄 야외박물관, 에도도쿄박물관, 오사카 역사박물관, 오사카시립주택박물관	파리 아스날관, 상해 도시모형전시관,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	프랑스 20세기 건축기록물 보관소

## ② 국토경관 향상

### 1) 경관가치에 대한 국민공감 형성

- (경관가치 인식 확산 및 국민참여 활성화) 국토경관 형성 및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미래 국토경관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
  - 국민이 소망하는 국토경관의 미래 모습을 실현하고자 국토경관 인식조사 및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품격 있는 국토경관의 형성 및 관리를 위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국토경관 미래상 설정
  - 마을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마을경관 가꾸기 운동 추진
- (국토경관자원 발굴 및 대표경관 형성)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전·관리하고 국토경관에 대한 국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토경관자원 발굴 및 한국 대표경관 형성 추진
  - 국토경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토경관자원 발굴
  - 국가 이미지를 고양하고, 국민의 경관보전·관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한국 대표경관 선정 및 홍보
  - 국토를 대표하며 미래 국토경관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상징 경관 사업 추진

## 2) 경관형성·보존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 (경관관리 역량강화) 국토경관 형성·관리의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한 기초연구 시행 및 관련기술 개발과 경관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 경관개선 효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 및 경제적 가치 도출을 위한 기초연구 발굴·시행
  - 아름다운 국토경관을 구현하고자 경관관련 시설물(방음벽, 농교, 지붕 등)의 재료개발, 전선·통신선의 지중화 등 기술개발 추진
  - 경관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보완, 경관 교육 실시 등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지원
- (경관행정 기반구축) 경관업무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행정 업무와 관리체계 개선 및 지역경관관리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 경관행정업무 체계 개선 및 민간전문가제도 활성화 등 지자체의 경관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관 행정지원 확대
  - 경관제도(계획, 사업, 심의 등)의 실효성 강화방안 마련 및 경관법 과 관련법간 연계 강화 등 경관관리제도 개선 추진
  - 지자체의 지역경관개선 노력에 상응하는 행·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방안 도입

### ③ 통일한국 건축 비전 제시

#### 1) 북한 건축문화 공동연구

- (북한 건축자산 공동 실태조사) 북한 건축자산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문화와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기초 연구의 중요한 플랫폼 구축
  - 역사적으로 남과 북이 함께 만들었던 근대이전의 건축자산, 일제강점기 시대, 해방이후 분단체제하에서 구축된 건축자산 등 시대상황별 건축자산 실태조사 및 특성 조사
  - 건축문화자산 및 근·현대 건축유산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 추진을 통해 건축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 및 교류의 기회 마련
- ※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서울과 평양’의 도시와 건축을 다루면서, 북한의 도시와 건축, 특히 평양의 도시와 건축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한 사례
- (남북한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 협력) 북한 건축유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남과 북이 공동으로 만들어 가야 할 통일시대의 정체성 및 가치 공유
  -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공동준비를 통해 남북한의 공통적 가치를 공유하고 통일시대 논의를 위한 기반 마련

#### 2) 남북 공동 미래 도시건축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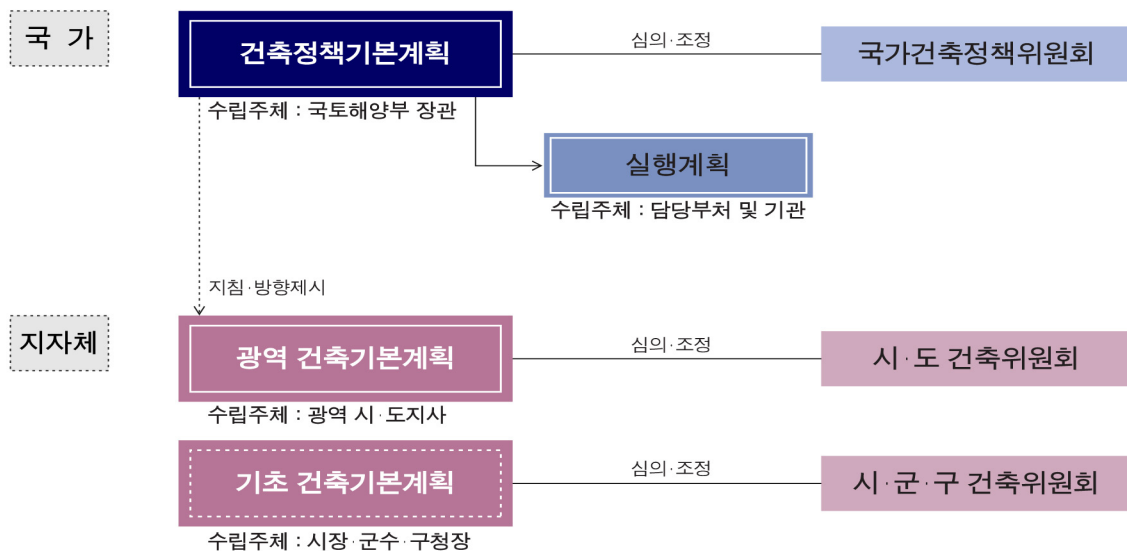
- (DMZ 공동 개발사업 추진) 남과 북이 접점을 이루고 있는 DMZ 활용을 위한 구체적 활용방안 모색
  - ※ DMZ는 백남준, 다니엘리베스키트를 비롯한 미술작가와 건축가들의 전시가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real DMZ’이라는 설치미술작업이 DMZ현장에서 추진 중
  - ※ 또한,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DMZ를 남과 북의 도시와 건축을 다루는 중요한 이슈로 다룸으로써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바 있음

- DMZ를 활용한 공원조성, 디자인 시설물 설치 등 건축 관련 프로젝트를 남북이 공동 추진하여 한반도 건축 산업의 화합의 장 마련
- ※ DMZ안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등, DMZ 평화공원은 남북으로 갈린 한반도의 자연과 사람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주목 대상
- (남북 맞춤형 미래도시 개발) 남한과 북한의 공동연구를 통한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바람직한 미래주택 및 도시개발연구 추진
  - 지역별 인구밀도 및 라이프스타일 등의 차이를 고려한 새로운 주택 유형 보급을 위한 기초연구 필요
  - 남북 공동 발전 및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한 미래 도시개발 전략 마련
  - ※ 광역도로망 구축, 산업·관광지 연계를 위한 철도 네트워크 구축 등 미래 한반도의 도시발전 방향 연구



## 1. 관련 주체별 역할

- (국가) 법·제도 정비, 디자인 행정프로세스 개선 등 계획의 실행을 위한 기반조성과 지원, 선도사업 추진에 중점
  - 국토해양부는 국가건축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집행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이를 심의·조정
  - 중앙행정기관은 실천과제에 따라 연차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소요예산의 편성·집행
  -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정책추진 전 과정에서 대한 모니터링 및 부처간 이견조정·정책갈등 해소
- (지자체)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건축기본계획 수립·추진
  - 광역 시·도는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집행하며, 광역건축정책위원회는 이를 심의·조정
  - 기초 시·군·구는 필요시 기초건축기본계획을 수립



## 2. 실천과제별 로드맵

### □ [정책목표 1] 행복한 건축실현

세 부 과 제	사 업 내 용	주관부처	협조부처	실행시점				
				'15	'16	'17	'18	'19
1-1. 생활공간의 안전성 증진								
1)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① 생활안전 증진사업 지원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					
	②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 확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					
	③ 실내건축 안전관리 절차 마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관리총괄과					
2)건축안전 제도기반 구축	① 지역건축센터 설립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행정자치부 민원제도과					
	②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국민안전처 안전제도과					
	③ 건축물 생애주기 정보구축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국민안전처 정보통계담당관					
	④ 공간위계별 재난·재해 대응 시스템 구축	국민안전처 재난대응정책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⑤ 건축물 안전점검 및 관리기준 강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국민안전처 안전점검과 안전제도과					
3)건축안전 인식향상 및 역할 강화	① 지역 공공시설과 연계한 건축안전 교육 및 홍보	국민안전처 안전문화교육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② 교육대상별 건축안전 프로그램 개발·활용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국민안전처 안전문화교육과					
	③ 건축안전 관계자 안전관리 교육 및 책임 강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국민안전처 안전문화교육과					

세 부 과 제	사 업 내 용	주관부처	협조부처	실행시점				
				'15	'16	'17	'18	'19
1-2. 생활밀착형 공간복지 체계 구축								
1)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시설 확충 및 개선	① 국공립 어린이집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② 생활권내 어린이집 확충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③ 노후·낙후 학교시설 정기 점검	교육부 교육시설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④ 학교시설 복합화 및 지역 커뮤니티 거점 활용	교육부 교육시설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고령화에 대응하는 노인복지공간 조성 확대	① 고령자 종합복지 서비스 시설 확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② 에너지 빈곤층 그린리모델링 행복 릴레이 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 관리정책과					
3)근린생활권 단위의 공간복지시설 통합적 연계	① 근린생활권 단위의 공간복지 마스터플랜 수립 제도 마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② 주택공급 사업 등과 연계한 복지통합형 공간복지 시설 공급 시범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1-3. 건축물 리뉴얼 촉진 활성화								
1)건축 리뉴얼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건축 역량 강화	① 공공건축 연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주민참여 확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② 건축 코디네이터 지원 제도를 통한 주민참여 증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③ 소규모 집수리 지역업체 역량 강화 지원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④ 농어촌 건축리모델링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도시내 기존 건축물 유희공간 재생 활성화	① 유희공간 현황관리 체계 구축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② 유희공간의 효율적 정비 및 활용의 선도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3)지역 커뮤니티 거점 공간 제공	① 유희공간 활용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 확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② 폐교를 활용한 주민커뮤니티 공간 활용 시범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교육부 교육시설과					

## □ [정책목표 2]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세 부 과 제	사 업 내 용	주관부처	협조부처	실행시점				
				'15	'16	'17	'18	'19
2-1. 공공건축 효율화								
1)공공건축 프로세스 체계화	① 공공건축 사전기획업무 강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					
	② 공공건축 성과관리체계 구축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					
	③ 공공건축 조성 업무의 총괄조정체계 구축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					
2)발주기관의 전문성 강화	① 지역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확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② 공공건축 업무 지원체계 강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③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확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④ 지자체 공공건축 발주부서의 전문직 확대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⑤ 건설공사 예산책정 지원체계 구축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2-2.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1)건축서비스업무 조달시장 선진화	① 기술력과 창의력 중심으로 설계자 선정방식 전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조달청 건설용역과					
	②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 강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③ 적정 보상비 책정 의무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④ 건축 엔지니어링 업무 계약체계 개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2)민간 건축시장 거래환경 개선	① 공정한 거래를 위한 계약제도의 합리적 개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② 건축사 업무범위 다양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③ 구조, 설비 등 ENG 분야 책임 강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3)창조적 인력양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	① 대학 교육제도 개선	교육부 대학정책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② 마을단위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③ 건축전문가 국제경쟁력 강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④ 개발도상국 건축시장 개척 추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외교부 개발협력과					
2-3. 녹색건축 실현								
1)녹색건축물 기준 선진화	① 국민 체감형 녹색건축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② 공공부문 녹색건축 선도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 정책과					
	③ 녹색건축 설비 및 시공 품질 강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2)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①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 정책과					
	② 기존 건축물 관리 및 인증기준 강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과					

## □ [정책목표 3] 건축문화 육성

세 부 과 제	사 업 내 용	주관부처	협조부처	실행시점				
				'15	'16	'17	'18	'19
3-1. 지역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								
1)건축자산의 가치 증진	① 건축자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② 권역별 건축자산센터 지정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2)한옥문화의 브랜드화	① 국민 공감 한옥 유형 개발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② 한국적 공간 브랜드화 지원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3)건축문화교육 및 홍보 확산	① 건축문화 교육 프로그램 다변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교육부 방과후교실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② 건축문화 기반 관광산업 육성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③ 건축도시박물관 건립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행복청 문화도시기획팀					
3-2. 국토경관 향상								
1)건축서비스업무 조달시장 선진화	① 경관가치 인식 확산 및 국민 참여 활성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② 국토경관자원 발굴 및 대표경관 형성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자원과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2)민간 건축시장 거래환경 개선	① 경관관리 역량 강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② 경관행정 기반 구축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도시재생과					
3-3. 통일 한국건축 비전 제시								
1)북한 건축문화 공동연구	① 북한 건축자산 공동 실태조사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 경제사회분석과					
	② 남북한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 협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남북 공동 미래 도시건축 모색	① DMZ 공동 개발사업 추진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통일부 정책기획과					
	② 남북 맞춤형 미래도시 개발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 기획단 기획 중괄과/ 통일기반조성과					

### 3. 기본계획 성과관리체계

#### □ 성과관리의 목적 및 원칙

##### ○ 범부처간 전략 및 추진과제의 종합관리

- 건축정책기본계획은 타 부처와 연계된 정책과제가 중요하며, 성과관리를 통해 부처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추진간 역할 분담 조정

#####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체계 구축

- 건축정책은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건축기본계획을 통해 구현되며, 원활한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관리

#### □ 기본계획 실천과제에 대해 2년 주기로 성과 측정

- (국토부) 소관과제와 부처별 과제, 지자체 추진과제 등에 대해 총괄적으로 취합하여 성과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국가건축정책위에 보고

- (지자체) 지역건축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사업과 시책을 시행하여 자체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국토부장관에 통보

- (국회보고) 2년 주기로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에 대해 국회보고

#### 《 성과관리 근거 》

- ✓ (건축기본법 제15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건축에 관한 주요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년마다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MEMO

MEMO



MEMO

MEMO